
Emerging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KDI-RIS-TAF 공동주최 전문가 워크숍/컨퍼런스 출장보고서

2012. 4

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1. 추진배경

2. 출장개요

- ① 출장목적 4
- ② 출장지 및 기간 4
- ③ 출장자 명단 4

3. 출장일정

- ① 출장자 주요 일정 5
- ② Pro-Poor Growth 전문가 간담회(Emerging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일정 6
- ③ Post Busan Development Cooperation 컨퍼런스(New Architecture, Actors and Opportunities) 일정 7

4. 전문가 워크숍 주요내용 정리

- ① Pro-Poor Growth: Conceptual Framework and Key Challenges 9
- ②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to Pro-Poor Growth 18
- ③ Developing Country Strategies for Pro-Poor Growth 28
- ④ Measuring the Impact of Inclusive Growth Efforts 36
- ⑤ Lessons from Asia's Experience on Pro-Poor Growth 41

5. 컨퍼런스 주요내용 정리

- ① Post Busan Reflection 54
- ② Capacity Development and South-South Cooperation 65
- ③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72
- ④ Lessons and Experience from DAC Countries 77

1

추진배경

- KDI와 TAF(아시아재단)는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2011년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 접근법의 부상”을 주제로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
 - 2010. 12월 기획회의 이후 2011. 3월 Kuala Lumpur 전문가 워크숍, 6월 Colombo 워크숍, 9월 서울 저자회의를 거쳐 최종 연구결과물로 단행본(Emerging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간, 부산 HLF4 부대행사에서 배포
 - KDI는 TAF, 베트남 MPI와 공동으로 2011. 11. 29일 부산 HLF4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1차년도 공동 연구사업의 결과를 공유, HLF4 본회의의 논의에 크게 기여
- KDI와 TAF는 이와 같은 1차년도 연구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도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정
 - 특히 개발효과성 제고의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인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달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
- 2012. 3. 5 ~ 6일 KDI-RIS*-TAF 공동주최로 개최된 델리 전문가 워크숍은 KDI와 TAF의 2차년도 공동사업 Dialogue 시리즈의 첫 번째 간담회
 -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 전통 공여국, 아시아 협력국 및 개도국 각각의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개발협력 접근법·전략을 공유했으며,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함.

* RIS(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 또한 KDI는 전문가 워크숍에 연이어 3. 7일 RIS, TAF와 공동으로 Post Busan Development Cooperation 컨퍼런스(New Architecture, Actors and Opportunities)를 주최
 - 인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HLF4의 주요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접근방식에 대해 소개했으며, 변화하는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통 공여국 입장에서의 도전과제를 다룸.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 KDI-RIS-TAF 공동주최 Pro-Poor Growth 전문가 워크숍 및 Post Busan 개발협력 컨퍼런스 참석

* 2012. 6월 중 베이징에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 중 서울에서 단행본 발간을 위한 저자회의를 개최할 예정

②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인도 델리
- 기 간: 2012. 3. 3(토) ~ 3. 9(금), 출·입국일 포함

③ 출장자 명단 : 총 3명

소속	성명	직위	출장기간
KDI	임원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3.3(토)~3.9(금)
	김용성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3.6(화)~3.9(금)

3

출장일정

1 출장자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3.3(토)	19:25	인천출발	OZ767
3.4(일)	00:55	델리도착	
	19:00~21:00	KDI 출장자 간담회(전문가 워크숍 준비)	Taj Mahal Mansingh 호텔
3.5(월)	09:00~17:00	Pro-Poor Growth 전문가 워크숍 Day 1	Taj Mahal Mansingh 호텔 Villa Medici Rooftop Floor
	19:00~21:00	KDI 출장자 및 JICA 연구진 간담회	
3.6(화)	09:00~14:00	Pro-Poor Growth 전문가 워크숍 Day 2	
	19:00~21:00	Post Busan 개발협력 컨퍼런스 환영만찬	India International Centre
3.7(수)	09:30~18:00	Post Busan 개발협력 컨퍼런스	Taj Mahal Mansingh 호텔 Longchamp room Rooftop Floor
3.8(목)	19:00~21:00	KDI 출장자 간담회 (워크숍 및 컨퍼런스 정리)	Taj Mahal Mansingh 호텔
3.9(금)	02:10	델리출발	OZ768
	12:20	인천도착	

② Pro-Poor Growth 전문가 간담회(Emerging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일정

○ DAY 1: 2012.3.5일 월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Villa Medici Roof top F. Taj Mahal Mansingh Hotel New Delhi	9:30~10:15	Welcome 및 Introductions - 좌장: Nich Langton(아시아재단, 인도지부) - 환영사 · Ambassador Shyam Saran(RIS) · Godon Hein(아시아재단) · 임원혁(KDI)
	10:15~11:15	세션1: AADC Year2: Themes, Objectives, Outcomes - Anthea Mulakala(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Coffee/tea
	11:15~13:00	세션2: Pro Poor Growth: Conceptual Framework and Key Challenges - 좌장: George Mavrotas(Global Development Network) - 김용성(KDI) - Prabodh Saxena(인도 재무부)
	13:00~14:00	오찬
	14:00~15:45	세션3: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to Pro Poor Growth - 좌장: Peter Beck(아시아재단 한국지부) - Wenping He(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 Masahiro TAWA(JICA) - Sachin Chaturvedi(RIS) Coffe/tea
	15:45~17:15	세션4: Developing Country Strategies for Pro Poor Growth - 좌장: Gavin Tritt(아시아재단 캄보디아지부) - Chou Heng(캄보디아 Council for Development) - Yuba Raj Bhushal(네팔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Secretariat) - Banchong Amornchewin(TICA)
	17:15~17:30	Wrap up of Day1

○ DAY 2: 2012.3.6일 화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Villa Medici Rooftop F. Taj Mahal Mansingh Hotel New Delhi	9:00~10:45	세션5: Measuring the Impact of Inclusive Growth Efforts - 좌장: Biswajit Dhar(RIS) - Manmohan Agarwal(CIGI) - Thomas de Hoop(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Delhi) Coffe/tea
	10:45~12:15	세션6: Roundtable Discussion: Lessons from Asia's Experience on Pro Poor Growth - 좌장: Jonathan Stromseth(아시아재단 중국지부) - Siriporn Wajjwalku(Thammasat대) - Taidong Zhou(아시아재단 중국지부), Yihuan Wang(중국 농업대) 대신 발표 - 임원혁(KDI)
	12:15~13:00	세션7: Conclusion and Plans for Next Meeting, Beijing - TAF/KDI
	13:00~14:00	오찬

③ Post Busan Development Cooperation 컨퍼런스(New Architecture, Actors and Opportunities) 일정

○ DAY 3: 2012.3.7일 수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Longchamp Rooftop F. Taj Mahal Mansingh Hotel New Delhi	9:30~10:00	Welcome - Ambassador Shyam Saran(RIS) - 임원혁(KDI) - Gordon Hein(아시아재단)
	10:00~11:45	세션1: Post Busan Reflections - Carlos Duarte(주인도 브라질 대사관) - 박은하(한국 외교부) - Ravi Bangar(인도 외교부)

		- Metasebia Tadesse(주인도 에디오피아 대사관) Coffee/tea
	11:45~13:15	세션2: Capacity Development and South-South Cooperation - 좌장: Jennifer Adams(USAID) - Pankaj Sharma(인도 외교부) - Jitendra Hargovan(남아프리카 공화국, National Treasury) - Ifar Subagiyo(인도네시아 Brawijaya대) - Natalie Shobana Ambrose(말레이시아,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3:15~14:15	오찬
	14:15~16:00	세션3: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 좌장: Gordon Hein(아시아재단) - 임원혁(KDI) - Xiaojing Mao(중국 통상부) - Sachin Chaturvedi(RIS) Coffe/tea
	16:00~17:30	세션4: Lessons and Experience from DAC Countries - 좌장: C. Raja Mohan(The Indian Express) - Ian Shapio(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dia) - Joanne Sharpe(AusAID) - Bernd Dunnzalf(주인도 독일대사관) - Elizabeth Warfield(USAID)
	17:30~18:00	세션5: Conclusions and Closing - 좌장: Anthea Mulakala(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 임원혁(KDI) - Gordon Hein(아시아재단) - Biswajit Dhar(RIS)

1 Pro-Poor Growth: Conceptual Framework and Key Challenges

1. 환경, 경제성장 및 빈곤

김용성 (KDI 연구위원)

□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 빈곤감소적 성장은 21세기의 새로운 목표로 부상, MDGs는 지속가능성장을 통한 빈곤감축 달성을 제안하며, 2010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써 환경에 대해 논의
-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의 두 가지 개념
 - '빈곤층 친화적' 성장: 빈곤층의 소득증가율 > GDP성장률
 - '빈곤 감소적' 성장: 빈곤층의 소득증가율 > 0

□ 환경, 경제성장 및 빈곤

- 환경에 대한 노력이 경제성장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의견이 공존
 -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복지 향상, 혁신기술을 새롭게 개발(높은 경제성장률 · 낮은 빈곤율)
 - 환경보호를 위한 극단적 조치는 경제를 왜곡, 불안정을 야기(낮은 성장률 · 높은 빈곤율)
 - 경제가 발전 초기일 때 환경에 대한 논의가 적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대, 환경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
- (환경과 경제성장: 경험적 시각) 경제개발과 환경오염은 뒤집어진 U shape의 관계(Environmental Kuznets Curve),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며 관계가 모호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제개발과 소득불평등은 뒤집어진 U shape의 관계(Kuznets Curve),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며 관계가 모호
 - 경제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이라는 결론 도출, 정부가 취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됨.

○ 환경과 경제성장: 이론적 시각

- 전통적 시각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경제가 생산가능 곡선 밑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성장저하를 야기
- 환경을 중시하는 경제가 필연적으로 성장후퇴를 야기할 수 없으며, 환경조치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을 감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경제성장과 빈곤

- 실험을 통해 정형화된 사실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단기간에 빈곤율을 감소시킴.
-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필연적으로 빈곤감축과 지속성장 달성
- (한국의 경험) 한국은 1928년 82%에서 2007년 9.2%로 절대빈곤율의 급격한 감소를 달성, 동 기간의 빠른 경제성장은 빈곤율 감소의 주된 결정요소
 -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빈곤을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의 경험: 성장/분배효과 변질)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시기에 빈곤을 감축하는 주된 요소는 순수경제효과
 - 최근 분배효과가 빈곤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정책

-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
 - ('양'의 상관관계) 투자로 인해 부유층 발생, 재분배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음. 사회가 평등할 경우 성장을 위한 여지가 소멸될 수 있음.
 - ('음'의 상관관계) 불평등 사회에서 국민 다수가 누진세를 선호, 성장을 저하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 불평등한 분배는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작용

-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OECD의 경험
 - 조세제도는 빈곤감축을 위해 비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며, 실업수당 및 공중보건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분배를 개선
 -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할 때 보건, 위생, 교육, 근로복지 등 개발환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결론

- 환경관련 규제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성장/분배 효과에 따른 빈곤감축을 위해 성장은 충분조건이 아님.
- 환경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 자본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정적일 수 있음.
- 정부는 분배를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고려: 교육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근로복지, 공중보건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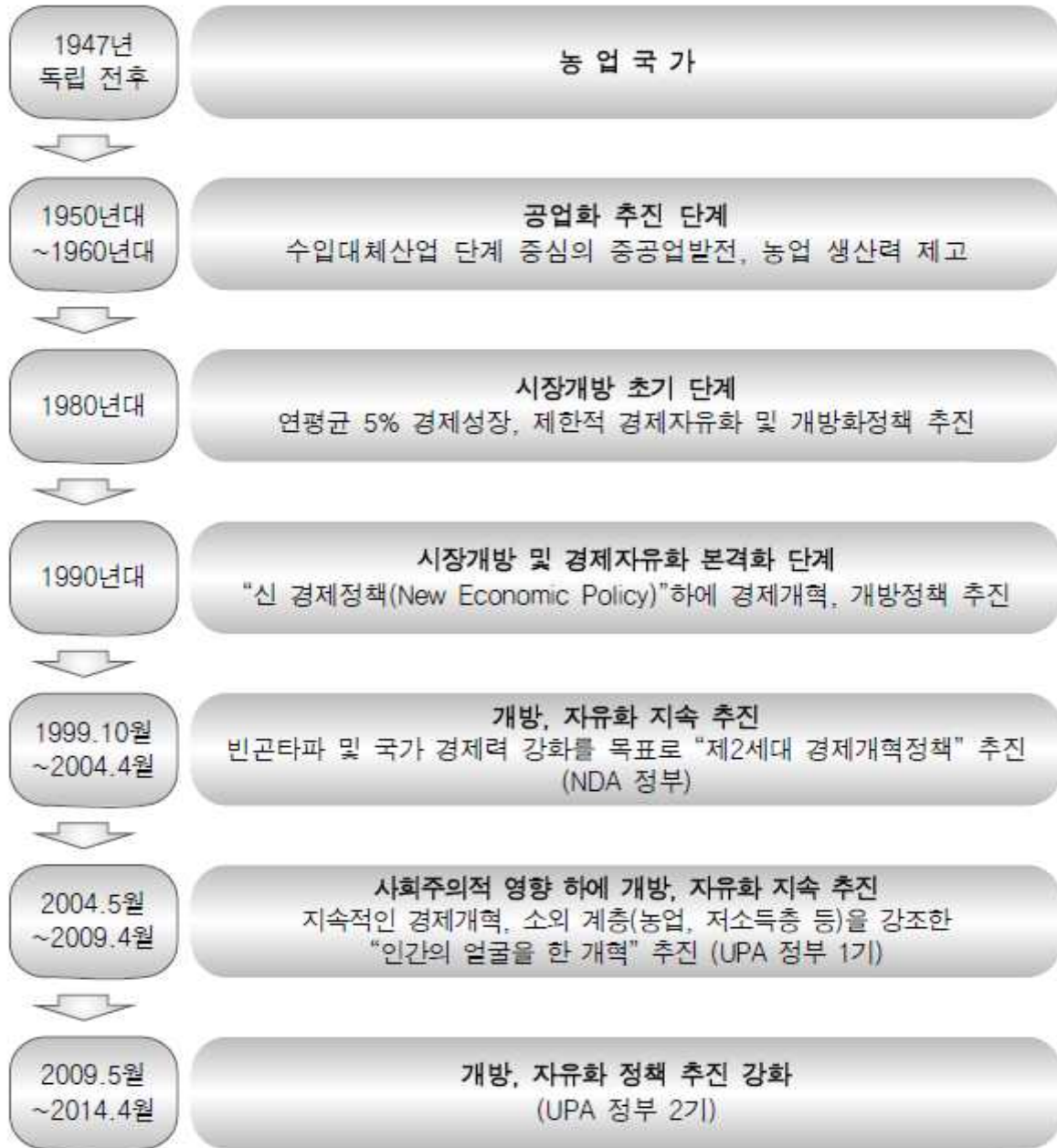
2. 빈곤감소적 성장: 개념적 프레임워크 및 주요 도전과제

Prabodh Saxena (인도 재무부 Joint Secretary)

□ 신생국으로서의 인도

- 인도는 독립 이래로 약 65년이 지난 신생국가이며 국민 기대수명은 65.4세임.
 - 젊은 세대의 노동인력이 많으며 국가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인도의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해 논의할 때 인도는 신생국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함.

[참고] 인도 경제발전 과정



□ 인도 개발과정에 대외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

○ 개요

- 1958년 Aid India Consortium 설립, WB 주도 하의 공여국 모임으로 인도 대인도 원조 조화를 목표로 함.
- 인도는 2003년 이후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비구속성 원조수원을 시작, 2004년부터 제한적으로 양자 원조정책을 도입

- 소규모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은 다자기구를 통해 받으며 이로써 원조 조화를 이루고자 함.
- 국제기구가 인도 NGO에 재정을 지원, 개발협력 수행
- DFID는 민간분야에 지원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새로운 원조체계를 형성

○ 대외지원 방식

-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기구에 따라 양자 및 다자의 형식
- 초기에는 양자지원이 다자보다 많았으나 다자지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현재는 양자보다 다자 대외지원이 더 많음.
- 차관(loan), 기술 협력(technical assistance), 무상원조(grant) 3가지 종류의 지원이 많이 수행되며 ODA는 작은 비중을 차지함. 무상원조보다 차관의 비중이 높음.
- 대외지원은 인도 인프라 및 사회부문 개혁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양자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을 받음. 이외 국제수지 및 투자 재원으로도 활용
- 대외지원은 인도 발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나 점차 대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

[참고] 대외지원의 활용

5개년 계획	주요 적용분야
No.1	보완 국내 자원
No.2	산업기반
No.3	산업 및 농업 성장
No.4	녹색혁명
No.5	국제수지
No.6	협력 movement
No.7	부채 서비스 30%
No.8	개혁 프로세스
No.9	frozen
No.10/11	사회부문, 인프라

[참고] 인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발계획	주요 목표	실적
제1차 5개년계획 (1951~5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불균형 시정, 국민소득 및 생산성 향상, 농업 및 전력개발 ○ 목표 성장률 : 연평균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3.6% 성장 ○ 식량생산 비교적 호조
제2차 5개년계획 (1956~6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 고용기회 증대, 기초공업 및 중공업개발 ○ 목표성장률 : 연평균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4.0% 성장 ○ 국제수지 악화
제3차 5개년계획 (1961~6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의 가속화, 자립경제 달성, 식량자급 및 중공업 우선 ○ 목표성장률 : 연평균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2.5% 성장 ○ 파키스탄과의 전쟁으로 계획 실패 ○ 농업생산 부진
제4차 5개년계획 (1969~7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정성장, 소득불균형 시정, 농업개발 및 수출증대 ○ 목표성장률 : 연평균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불순, 석유파동으로 실적 부진 ○ 연평균 3.4% 성장
제5차 5개년계획 (1974~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경제 확립, 국민소득 평균 및 생활개선, 수출증진, 물가안정 ○ 목표성장률 : 연평균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종료
제6차 5개년계획 (1980~8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공업기반 공고화, 자립경제 정립, 기술개발 ○ 목표성장률 : 연평균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5.1% 성장
제7차 5개년계획 (1985~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 고용증대 및 식량증산 ○ 목표성장률 : 연평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5.8% 성장 ○ 국내저축율 : 20.3%
제8차 5개년계획 (1992~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건강 및 교육의 질 향상 ○ 완전고용실현 및 빈곤타파 ○ 인구증가의 적정 수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7% 성장
제9차 5개년계획 (1997~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타파 및 고용 증대 ○ 농업생산 증대 ○ 문맹 타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5.4% 성장
제10차 5개년계획 (2002년~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타파 및 고용 증대 ○ 인구 억제 및 교육기회 확대, 문맹 타파 ○ 생활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7% 성장
제11차 5개년계획 (2007년~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 지역간 균형 성장을 위한 "포괄적 성장 (inclusive growth)" 지속 추진 ○ 빈곤 타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 ○ 민간 분야의 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목표성장률 9.0%~10%

[참고] 인도의 부문별 인프라 개발계획(도로, 철도)

◆ 도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전임 NDA 정부 Vajpayee 총리 1998.10월 주요산업 및 무역거점을 연결하는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 1단계는 총길이 7,498km의 델리-콜카타-첸나이-뭄바이 등 4개 도시를 연결하는 'Golden Quadrilateral'이고, 2단계는 인도북부 스리나가르와 남부 칸야쿠마리를 연결하는 '남-북 고속도로' 및 서부의 포르반다르와 동부의 실차르를 잇는 '동-서 고속도로'로 총길이 6,647km임.
- 현 UPA 정부에서도 2005.1월 총리주재 '인프라위원회'에서 향후 7년 동안 추진할 도로확충계획을 확정함. 3단계 계획은 기존 국가도로망 12,000km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GQ 및 NSEW와 연결, 주요 주의 수도들을 최신 고속도로망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함. 4단계계획은 기존 고속도로를 개량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또한 '동북부지역 특별개발촉진도로 프로그램'에 따라 동북부 낙후 지역주의 수도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주 도로 개선공사가 포함
- 더불어 인도 정부는 5단계(6,500km의 6차선화), 6단계(1,000km의 expressway 건설), 7단계 계획도 추진 중

◆ 철도

인도 철도망은 세계 최장, 전장 10만km, 종사인구 160여만명, 육상을 통한 화물수송 40%, 여객수송 20% 점하고 있음.

- 철도사업은 시설·신호체계·화물적재 및 하역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과 고속도로 및 항공과의 수송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송량 및 비중이 하향추세
- 인도정부는 철도운송사업의 현대화 및 효율화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및 일부사업부문의 민영화 확대 추진 중인 바, 수송밀도가 높은 구간의 시설확장, 관광전용열차 도입, 주요 상업 및 산업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의 추가화물열차 운행 등에 민관합작투자(PPP)를 권장
- 인도 철도부는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철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승차권발매를 포함한 철도사업 회계업무의 전산화, 수익성 제고, 일부노선의 민영화, 비핵심 사업부문의 아웃소싱 등이 이에 해당함.
- 인도 철도부는 국영철도 Vikas Yojana가 계획하고 있는 Hassan-Mangalore (약 6,500만불), Gandhidham-Palanpur(약 8,800만불), Pahvel-JNPT(약 1,200만불) 등 항만연결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참여 유치를 통해 비용절감 및 효율증 증대를 꾀함.

[참고] 인도의 부문별 인프라 개발계획(지하철)

- 인도 정부는 도심의 육상교통편 확충이 토지매입 곤란, 대기오염 심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메트로(Metro) 시스템 도입을 통한 도심 교통수요 해소를 추진하게 됨. 이에 1984년 콜카타에 인도 최초의 지하철이 도입된 이래 수도 델리에도 지하철이 개통하였으며, 앞으로 뭄바이,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가 뒤따를 예정임.
- 델리 메트로 1단계(Phase I) 사업은 총연장 65.11km이며 지하구간 13.01km와 지상구간 52.10km로 구성되었으며 2002.12월 이후 2005.1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였음.
- 델리 메트로 2단계(Phase II) 사업은 총연장 127km이며 2010년 영연방 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 개막에 맞춰 개통 완료됨.
- 한편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한 델리메트로 3단계(Phase III, 112km) 사업은 총사업비 70억미불 규모로 이중 일본의 JICA 차관이 약 50%를 차지, 첫 번째 차관이 2012.1월에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운영을 목표로 도시개발부가 델리메트로철도공사(DMRC)에게 4단계(Phase IV, 108.5km)사업의 상세 프로젝트 리포트 준비를 지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구간 확정 등).
- 콜카타 메트로는 1972년 공사를 개시하여 1984년 1단계 구간이 완성되어 운행에 들어갔고, 1995년 최종 구간이 완공되어 전면적인 운영을 개시한 바, 총 연장은 16.45km이며,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30km임.

□ 인도의 빈곤감소적 성장

- 최근 정치적, 정책적으로 빈곤감소적 성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
- 2006~07년 사회서비스 분야에의 지출이 21.6%에서 2011~12년 25%로 확대, 특히 교육과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GDP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7년 5.57%에서 2010~11년 7.34%로 증가

- 교육: 2.72%(2006~07) → 3.11%(2011~12)
- 보건: 1.25%(2006~07) → 1.30%(2011~12)
- Entitlement를 통해 시민들이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이는 인도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명시
 - 2005년 정보에 대한 권리
 - 2006년 고용에 대한 권리
 - 2010년 교육에 대한 권리
 - 식량안보에 대한 권리: 2012년 주목하고 있는 분야
- (flagship 프로그램) 지난 5년간 1.4조 달러를 들여 13개 flagship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프로그램 중 교육과 보건 두 분야의 프로그램만 대외 파트너와 연계하여 진행

□ 개발의 이면

- 지난 10년간 빈곤층도 개발의 혜택을 얻었으나 빈곤·기아 가정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음.
 -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
- 사회적으로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
 - (보건) 5명 중 2명은 영양실조, 성인의 1/3은 신체용적지수에서 비정상 판정을 받음. 가임기 여성 중 절반이 빈혈 질환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
 - (인프라) 5억 이상 인도인이 전기가 없이 생활하고 있음.
 - (위생) 인도인 중 1/3 미만이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음.

□ 2015 MDGs 달성과 그 이후

- 대외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유럽 금융위기로 유럽으로부터의 대외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움. 유럽 내 미디어와 의회에서 대인도 지원에 대해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기술협력만 제공할 가능성
 - 그러나 독일, 프랑스가 제공하는 차관은 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WB 지원 감소, IDA는 불확실, IBRD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DFID와 EU로부터 제공되는 무상원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양자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DB와 JICA 가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
- 인도 개발정책에 대외지원이 각인
 - 하위 국가적 단계에서는 아직 대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도시개발, 하수도 건설 등 사회 인프라 분야를 비롯, 재정부문까지 대외지원을 받음.
 - 대외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분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강조
- 향후 파트너십
 - 인프라 발전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
 - 기술협력 및 지식공유 추구하며, 산업을 고부가가치 구조로 개혁

②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to Pro-Poor Growth

1.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개발협력 접근법: 교훈과 전략

He Wenpi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교수)

□ 빈곤감소적 성장의 정의

- (1) 빈곤감소적 성장은 평균 소득증가율 보다 빈곤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을 의미
 - 성장기간 동안 분배의 변화에 중점을 두며, 빈곤층의 소득이 다른 소득층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해야 함.
- (2) 빈곤감소적 성장은 빈곤을 감소시킨 성장을 의미
 - 빈곤층의 평균 삶의 수준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

□ 현 개도국에서의 성장의 모습: 소득불평등도 향상

- 선진국 내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복지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함.
- 현 개도국은 '성장'은 하였으나 '개발'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
 - 경제는 성장하였으나 사회 불평등도가 증가(지니계수 증가)했으며,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확대

- 경제성장률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가 없거나 아주 작음.
- 2011년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 6%,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불평등도 증가, '반쪽 성장'이라는 평가
- 나이지리아의 경우 GDP 성장률 8%를 보이며 경제가 신장된 반면 극빈곤 비율도 함께 증가
- 중국도 지니계수가 0.41이상으로 같은 쉐린지에 직면하고 있음.
- 2015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최근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파장을 보면, 국제사회가 경제 성장과 소득불평등 관련 사회 불균형 해결을 위한 문제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개발을 촉진, 평등을 보장하며, 공공사회 자산을 평등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에 대한 교훈

- 저개발국-자원 보유국, 도시-지방, 국내 산업분야 간 자원 투입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협력정책은 개도국의 반빈곤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
- 남남협력을 통해 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개도국은 더욱 동등한 지위에서 기술을 도입·적용할 수 있음.

□ 중국의 경험과 교훈: 아프리카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중국의 경험

- 중국의 대외 개발협력 역사가 길지 않지만 빠르게 발전, 대외원조를 위한 중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을 백서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중국은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를 향상시키고, 아프리카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구매력을 개선
 - 아프리카 내 이동통신 사용자 수 증가, 자가 교통수단 사용자 증가 등
-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프리카의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국민들이 더 나은 도로, 철도,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009년 11월 개최된 제4회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에서 새로운 對아프리카 개발 지원전략 패키지가 소개됨. 이는 아프리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환경보호와 관련
 -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 제공, 아프리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의 특별 차관을 마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할 예정
- 중국을 위한 교훈
 -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발협력의 경우 사회복지 제도가 국가 내부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것을 감안, 개도국의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접근법과 협력 전략을 사용해야 함.
 -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더 주목하여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임. 과거 개도국 능력배양을 간과하여 시행한 프로젝트 중 다수가 일회성으로 종료됨.
 - (White elephant 방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징적 건물을 세우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도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장, 산업 건물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이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함.
 - 대부분 개도국의 도시에서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도시보다 지방개발에 더 중점을 두어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해야 함. (사견으로 르완다에서의 경험을 보면, 수도인 Kigali와 다른 지역간 큰 격차가 있었음. 중국 의료팀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프로젝트 수행, 지방에 학교를 세우는 이니셔티브가 발의되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소득국에 개발협력을 더 제공해야 함. UN의 MDGs(2015년까지 절대 빈곤율을 1990년의 절반으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이 남아있음.
 - 중국내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 부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원조 유관 부처 및 부서간 혼란, 체계가 정립되지 않음.
 - 대규모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가 부족
 - 원조·협력 활동의 감독 및 평가 메커니즘 부재

□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전략

- 개도국의 빈곤 국가전략을 적극 지원
 - 개도국 빈곤층을 포용한 국가별 프로세스와 분석결과에 기초할 경우에만 빈곤감소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
- 도시보다 지방에 자원을 더 많이 집중, 로컬 근로자에게 적합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또한 그들이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이행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해야 함.
- 많은 개도국에서 여전히 농업이 주요 산업임을 감안,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해 농업의 발전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농업의 발전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개도국 빈곤층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 가능
- 경제 인프라가 불충분·부적절한 경우 빈곤감소적 성장 달성에 장애가 발생함. 인프라를 위한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더욱 효율적인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유지가 요구됨.
- 실업문제와 관련,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사회 안정유지에 도움을 주어야 함. 고용(특히 여성 및 청년고용)은 개도국의 빈곤층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주된 요소
- 사회보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 예를 들어, 지방 빈민가에 의원, 학교, 시장을 건설하고 전기 및 위생 시설을 설치
- (남남/남남남 협력 확대 및 강화) 개도국 내에서 남남/남남남 협력을 추진할 것 제안
 -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과 인도가 남남협력을 수행(아프리카-중국-인도 간 남남남 협력), 중국은 인프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인도는 통신, 보건, 교육, 식량안보 촉진 등 경제 기술협력 분야에 중점

2.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JICA 접근법

Masahiro TAWA (JICA Director General 선임고문)

□ 배경

-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계층간 격차와 불평등도가 확대
 - 개도국에서 MDGs 성과가 부유층에 집중되어 전달되는 경향
 -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거시경제 지표가 좋은 것과는 상관없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족이 커지면서 혼란을 야기
 - 소수민족(인종), 빈곤층 등이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로부터 제외되는 사례가 많음.
- 빈곤감소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
 - 성장의 과정에 빈곤층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빈곤감소적 성장이 중요하게 간주
 - 사회 불평등은 개발·성장의 과정에 취약그룹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
 - JICA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빈곤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빈곤감소적 성장 관련 프로젝트를 확대함. 그러나 현재까지는 빈곤층의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함.
 - 따라서 향후 빈곤층의 개발과정 포함에 더욱 주력하고자 하며, 다방면으로 사회격차 완화 및 개발과정에서의 빈곤층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포용적 개발을 위해 노력

□ JICA 원조정책에서의 포용적 개발

- 2008년 이후 “포용적·역동적 개발”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로컬 단계에서의 운영을 실시, 이에 대한 우위를 지니고 있음.
- 인간안보 관점에서 볼 때, 포용적 사회·기관 양성은 인도적 생활 달성을 위해 중요
- JICA는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으로 포용적 개발을 반드시 간주

* JICA의 비전과 미션

비전: “포용적·역동적 개발”

- 포용적 개발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 이슈를 인지하고, 개발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개발 접근법을 의미
- JICA(신JICA: 2008년 구JICA와 JBIC 통합 후)의 역할은 이러한 개발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미션 4: 인간안보 달성

- 인간안보의 개념은 각 개인을 중심으로 간주, 그들을 결핍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
-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안보에 위배되는 이슈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 이 접근법은 자존감 있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함.
-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JICA는 사회·기관의 능력 강화 및 국민들의 위기극복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포용적 개발을 위한 접근법

① 포용적 개발 원칙 포함

- JICA의 원조 전략 및 프로그램/프로젝트에 포용적 개발원칙 포함
- 포용성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및 정치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② 그룹 분석

- 각 그룹(도시/지방, 소득수준, 성별, 나이, 직업, 교육수준,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 분석
- 개발이슈와 타겟그룹이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함.

③ 파트너십

- 지방정부 및 NGO, 중앙정부, 공여국 등 각 개발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목표
- 파트너십을 토대로, 공유된 타겟과 지표 도출 가능

□ 운영체계

○ 1단계: 국제 수준 분석

- 경제·정치·사회 방면 격차를 분석하여 개도국 내 불균형도 혹은 격차의 정도를 파악
- 지니계수, Poverty gap and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등 사용

- 2단계: 국별(국내) 수준 분석
 - 국제 수준 분석을 바탕으로 소득수준, 정치참여, 교육의 질 등에 대해 분석
 - 국가 내부적으로 타겟그룹이 누구이고 개발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 JICA 국별 분석 프로세스(CAW: country analytical works)*를 통해 수행
- 3단계: 프로그램/프로젝트 형성-이행-평가
 - 직업훈련, 제도적 시스템개발, 교육과정 개선
 - 국별 수준 분석에서 개발이슈를 명확히 하고자 원조 프로그램/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이행
 - 결과는 타겟그룹 간 격차가 감소하였는지, 포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됨.
- 각 단계에서 포용적 개발의 개념이 중요하게 간주됨.

<p>* JICA CAW(Country Analytical Wor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효율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JICA와 수원국간 정책대화 및 자문시 활용 ·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경제·사회 상황 및 개발이슈, 분야의 전망 분석 - 과거 협력 사례로부터 교훈 - 다른 공여국의 원조 사례 - 제공 프로세스에서의 이슈 · 2011년 사업국가 아시아 15개국 및 태평양 지역,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중동 및 유럽 3개국
--

□ 포용적 개발을 위한 도전과제

- 포용적 성장 혹은 포용적 개발
 - 성장은 포용적 개발의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단순 경제성장만 추구할 경우 빈곤층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각 그룹에 대한 세부 데이터 수집
 - 국내에서의 타겟그룹 선정과 개발이슈 파악이 중요한데, 수집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고려해야 함.

- 세부 분석결과를 도출에 따르는 시간
 - 세부결과 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자세한 정도와 소요시간 들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각 개발 관계자들 간 이해를 공유
- 포용적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 수행 시 공여국과 수여자국간 조화 요구

□ 결론

- 사회 불평등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결과, 개발 접근법의 중점분야가 빈곤 감소적 성장에서 포용적 개발로 변화
- 성별, 인종, 종교 그룹 등 세부적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격차를 인지, 그에 따라 수원국 개발 활동을 지원
- 공여국과 수원국간 포용적 개발에 대한 전략 및 “포용적 지표”를 공유

3. 개발협력 접근법과 빈곤감소적 성장 전략

Sachin Chaturvedi (RIS 선임연구위원)

□ 빈곤감소적 성장은 무엇인가?

- 성장과정에 따라 불균형 발생, 빈곤감소적 성장의 정의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
- 개발전략에서 빈곤층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타겟그룹·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집중적으로 성장시킨 후 이로부터 spill over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도 고려
- 빈곤감소적 성장의 두 가지 정의
 - (Baulch & McCulloch, 2000) 모든 계층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때, 빈곤이 더 감소한 것을 의미하며, 분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다른 계층의 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목표
 - (Ravallion & Chen, 2003) 성장의 결과로 빈곤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배 및 국민 평균 생활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

□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옵션

- 1970년대 이후 거시경제에 주목하는 접근법과 세부 산업분야에 주목하는 접근법에 대해 논의
- 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수출주도 방식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구식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현재 시점에 수출주도 방식의 성장전략을 모방·적용할 수 있는가?
 - 아프리카의 성장·개발전략에 대해 논의할 때 단순히 과거의 성장모델을 적용하지 말고, 현재 시점의 새로운 개발 환경을 고려해야 함.
- 수출주도 성장전략 혹은 국내수요주도 성장전략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
 - 소규모 경제국가의 경우 국내수요 주도 성장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시장규모 등 충족조건을 고려해야 함.

□ 인도의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주력 분야로 농업을 선택

- 인도는 인구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인도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업분야 개발을 통해 빈곤감소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 태국의 식품공업 발전사례를 벤치마킹
- 제조업·서비스 분야 등 다른 산업에서의 GDP 성장보다 농업에서의 GDP 성장이 빈곤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 농업과 빈곤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판단됨.
 - 농업 노동 생산성 1% 증가하면 극빈층 인구 0.6~1.2%가 감소
-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해 공정한 자원분배 등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농업의 성장이 침체된 이유

- 세대간 분열은 농업 성장 침체의 원인으로 간주됨.
- 정부는 에너지 가격조정 등 적절한 정책·전략을 마련하여 부정적 충격을 완화할 것이 요구됨.
- 기술에의 접근성이 낮아 혁신을 이루지 못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틀에 박힌 해결방법만을 활용

□ 농업분야의 핵심적 특징

- 1970년대 초 인도 GDP 중 농업의 비율은 45%였으나 16%로 하락, 그러나 농업 종사인구는 여전히 전체의 57%를 차지함.
 - (농업종사인구) 중국은 2002년에 44%, 브라질은 2004년에 21%
- 농업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이 중요하며, 기술과 혁신은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 주요 원천으로 간주
-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예측이 중요 요소로 간주
- 농업의 발전이 전반적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
 - 경제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가, 평균 농작지 크기를 확대해야 하는가, 농업개혁 프로그램 달성방안에 대한 논의

□ 농업분야 예측사항

- WTO 영향, 기후변화, 도시수요 증가, 민간분야 개발, 바이오기술, 정보시스템의 세계화 등이 인도 농업 발전에 도전과제로 작용
- 향후 농업 관련 세계 정보심화 경향, 에너지 가격 및 기타 원자재 가격 급등, 농업 규모 확대 전망

□ 개발협력과 'Development Compact'

- Development Compact는 주로 남남협력을 통해 수행
 - 남남협력은 무역, 투자, 기술발전을 패키지 묶어서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
 - 기술은 무료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그러나 개발 Compact에 기술을 포함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무역) 시장 접근성, 국내지원 정책, 비관세장벽 · 기준
 - (투자) 기업개발, 시장/가치사슬
 - (기술) 생산성, 가치사슬
- 개발협력의 기본 바탕은 상호 이익으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제 개발원조의 구조 및 체계가 변화되어야 함.
 - 유럽 선진국은 그동안 민간분야의 개발협력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부산총회를 통해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민간분야의 역할이 강조, 남남협력과 민간분야 개발협력의 연계도 가능함.

□ 향후 과제

- 남남협력 국가들은 서로 비슷한 빈곤 및 인프라 개발 이슈에 직면함. 따라서 실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성공적 해법을 서로 공유할 것이 요구됨.
 - 기술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지방 빈곤층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능력개발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도전과제
 -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소규모 농작지의 가치사슬에 주목,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함.
 - 저개발국·개도국 중심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개발격차를 감소해야 함.
- 인도는 개도국에 package 형태의 개발협력을 제공하는데, 베트남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 아프리카에서 seed enterprise 시작

③ Developing Country Strategies for Pro-Poor Growth

1. 캄보디아 경제개발: 친빈곤층 정책인가?

Chou Heng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선임 정책 전문가)

□ 근대 캄보디아의 역사

- 1991년 파리 평화협정에 서명
 - 1993년 첫 민주적 방식 선거
 - 1998년 국가통일, 평화달성
 - 2003년 헌법개혁을 통한 정치적 안정
- ⇒ 기반이 취약한 신생국이지만 발전하고 있음.

□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특징

- (독특한 경제성과) 지속적으로 GDP가 증가, 지난 10년간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함.
- 개발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각각 다른 비율로 개선, 성장에 따라 불평등도도 증가함.
 - 1993~2004 동안 지방의 불평등도가 빠르게,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 2007년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빈부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며, 향후 5년 간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결과를 얻음.

⇒ 민주정부를 위해 사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도전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

□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성장이익 확산

○ 성장, 고용, 효율성 및 균등을 위한 Rectangular Strategy(RS)

- 2008년 제2단계 시작, 2013년까지 수행
-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적 정책을 통해 빈곤율을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도전과제로 남아있음.
- RS2는 장기 전략으로, 성장을 위한 기회와 성장의 결실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

○ 공공재정운영(PFM) 개혁 프로그램(2004~2015)

- 그동안 공공재정에 대한 계획 및 전략이 부재, 정부의 우선 주력분야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공공재정 상태가 왜곡되어 있었음.
- 공공재정이 활용되는 곳과 정부의 우선 주력분야(교육, 보건, 농업, 지방개발)가 상이함.
- 이에 따라 PFM 개혁 프로그램이 시작, 배당효율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정부의 예산지출이 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도록 노력

□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있는가?

- 최근 국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사회 안전망의 필요에 대해 인식,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도입하기 시작
- 체계적으로 구성된 사회 안전망은 사회 취약성과 왜곡을 방지
 - 캄보디아의 사회 안전망 정책은 구성요소가 아직 분절화 된 상태이며 범위와 재정이 제한적으로 빈곤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보건평등기금은 선별적으로 이행, 빈곤층이 병원에 갈 때 정부에서 병원비를 부담
- 2011년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 개발협력은 사회 재분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

○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이 변화

- 신흥국(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이 지원하는 원조자금 등 대안재원 활용 가능
- 캄보디아는 FDI 투자지역으로 매력적, 對캄보디아 FDI 유입 증가
- 지속적 경제성장과 석유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정부의 예산 확대

□ 결론

- 캄보디아의 일관된 빈곤감소적 성장 전략은 아직 부재
- 빈곤감소적 전략의 핵심은 대다수의 인구가 생계를 위해 농업에 종사함을 감안, 농업을 중심에 둔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원조자금을 잘 배분하고 운영한다면, 원조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 가능

2.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네팔의 전략: 양상과 교훈

Yuba Raj Bhusal (네팔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Secretariat, Member Secretary)

□ 사회·경제적 지표

- 네팔은 토지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 총 147,181 평방 km 중 사용가능 면적은 불과 16%에 달함.
- (산업) 농업 및 관련분야에 국민의 74%가 종사, 제조업은 11%, 서비스 분야에는 15%가 종사
- 전체 수출·입량은 적은 편
 - 석유 수입량이 많아 총 수출량보다 석유 수입량이 더 많음. 경상수지 4억 4900만 달러 적자
 - 주요 수출품은 면제품, 가죽제품, 씨앗, 차, 장신구, 폴리에스테르 방적사, 허브 등

□ 빈곤 추이 및 영향요소

- 2011년 기준, 빈곤선 이하 국민이 전체의 약 25%로, 이는 1996년 42%, 2003년 31%에서 감소추세
- 빈곤층은 주로 고산지대에 거주, 극서부 지방에 거주함. 국민들이 낮은 경사로 지역(hill)으로 이주하는 경향
- 빈곤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후변화, 산림파괴 가속화, 활용가능 농경지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인도, 걸프지역 인신매매가 인권에 큰 위협

□ 빈곤감소적 성장전략 및 TYP(3개년 계획)

- 1956년 이후 계획 개발정책에 착수, 빈곤감소적 성장전략 수립 및 이행
 - 현재까지 11개 계획이 이행되었고, 12번째 계획으로 TYP(2010~13년)가 진행되고 있음. TYP는 MDGs와 동일선상에서 진행
 - 13번째 계획이 1년 내에 수립될 예정
- 사회·경제지표는 성공적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간과되어온 분야가 존재,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요구
- (TYP 중점분야) 고용창출, 경제 불평등 완화, 지역간 균형 및 안정추구, 사회적 박탈 감소, 국민 생활수준 개선,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극빈곤율 감소(25.16%→21%)

□ TYP의 목표 및 전략

- (목표) 국민들의 생활수준 실질적 개선 및 변화, 빈곤감축 및 지속적 평화를 구축 (고용 중심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경제성장)
- 빈곤감소적 성장 달성을 위한 6개 전략
 -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고용 중심, 빈곤감축 달성
 - 지역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인프라
 - 지속적 평화 및 평등하고 포용적 성장 추구
 - 경제·사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전환에 기여

- 좋은 거버넌스 및 효과적 서비스 전달에 기반, 성과중심 개발을 창출
- 개발에서 무역을 주류화 하여 경제적 안정 강화

○ 주력 분야

- (인프라) 균형적 인프라 강조, 광범위한 성장과 빈곤감축 달성
- (농업, 관광, 산업 및 수출 강조) 농업, 관광, 산업 및 수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고용의 기회를 창출, 경제성장 가속화
- (소외된 계층 포용) 소외된 커뮤니티, 지역, 성별 계층을 개발을 위한 국가적 프로세스에 포용하기 위해 투자 향상
- (기본욕구 충족) 식수, 에너지, 도로, 커뮤니케이션, 식량안보, 의료, 교육 등 인간의 기본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투자를 증진
- (좋은 거버넌스)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과 시기에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거버넌스 구축,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달성하기 어려움.
-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 네팔은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안정을 주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간주, 우선순위를 부여

□ 최근 네팔의 주요노력

- 네팔여성들의 삶이 어려운 것에 주목, 성평등 달성을 위한 예산마련
-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예산마련
- 고용 프로그램 및 고용보장법(100일 고용/50% 수당) 추진
- 즉각 구제 프로그램(2011) 및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2012) 추진
- 언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전 마을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 국가 전역에 걸쳐 도로망 구축 추진
- 총리 참석한 자리를 마련, 정기적으로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검토

□ 교훈

-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국민들과 빈곤가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중점적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함.
 - 빈곤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소득에 따라 다른 색의 카드를 배부
- 재해관련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특정 기간제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배정해야 함.
- 정부는 지방·도시근교 발전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개발 파트너들은 이와 관련한 합리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제안
- 극서부 지역 등 지방·근교에서의 양성평등 가속화 추진
- 개발 프로그램을 평가할 제3의 기관이 필요
-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함.

3.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태국의 전략

Banchong Amornchewin (T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nership 부서, Director)

□ 태국의 빈곤

- 태국정부는 1992년 이후 빈곤문제를 국가 주요 아젠다로 간주, 2008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
- 빈곤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방면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
- 빈곤을 변화
 - 1988년 42.21%에서 1998년 20.98%로 감소
 - 2010년 7.75% 기록

□ 농업분야 빈곤 발생원인

- 지식과 운영기술 부족하며 자금이 부족
- 토지, 관개수로 등 관련 인프라 시설 부족
- 농산품 가격 및 마케팅 상의 문제

□ 친빈곤층 정책 프레임워크

- 1997~2001년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중심 접근법에서 사람중심 개발 접근법으로 상당한 전환이 발생
 - 정부가 농업 종사자에 주목하기 시작, 정부는 빈곤감축을 위한 전체적 접근법을 강조
- 2002~2006년 동안 주된 정책 원칙으로 Sufficiency Economy 철학을 추구
- 국가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달성한 후, 행복을 추구, 2007~2011년 간 사회 행복지수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됨.
- 2012~2016년 동안 Sufficiency Economy 철학 하에 균형적 발전을 추구,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빈곤감소를 위해 노력

□ 빈곤감소를 위한 3가지 접근법

(1) 정부 차원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

- 거시경제 조율
 - 균형적 성장을 위해 국민경제 강화 추진하며, 특히 친빈곤층의 경제 성장을 위해 농업·농공산업·건설·서비스 분야에 주력
 - FTA 등 무역 자유화 촉진정책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것을 감안, 지역농민 보호정책이 필요, 농산품 및 고용 부가가치화
 - 최근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성과 없이 예산만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선이 요구
- 빈곤층을 위한 기회·잠재력 확대
 - 지역 커뮤니티에 전문가가 있어야 지역 전체로 지식을 전파, 공유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커뮤니티 교육 프로세스를 개발, 커뮤니티 러닝 센터 설립, 로컬 포럼을 개최
 - 지방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 자원 활용 극대화를 추진
 - 커뮤니티와 시민사회의 통합을 촉진, 강한 커뮤니티를 수립하도록 유도
 - 정부의 커뮤니티 지원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을 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취약그룹을 위한 사회보장 마련
 - 취약그룹을 포용하는 사회보험을 마련,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빈곤층으로 하여금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지방기관이 복지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회전자금 마련
- 커뮤니티 복지
 -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험 마련, 사회보호대상자 가족 장려를 위한 세제 조치 등 추진
- 빈곤층을 위한 국가 자원운영
 - 커뮤니티가 지역 자연자원과 환경을 운영하고, 토지개혁, 수자원 개선을 통해 농업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이를 위한 관련법을 검토, 자연자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
- 빈곤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개선
 - 중앙·지방 공공부문의 역할을 조정하여, 빈곤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함.
 -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예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 관련 특별 예산을 지원, 홍수 등 재해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2) 커뮤니티 차원

- (핵심개념) 강하고 자립적인 사회구축 및 사회구성원 생활의 질 개선
- (주요요소) 생산비용 감축, 지방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창출, 지역재정확보 및 저축 장려

(3) ODA

-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술과약, 현장 비즈니스 중심모델, 대안·녹색 에너지 개발, 관개수로 운영·통제 및 농업발전 기여에 활용

4 Measuring the Impact of Inclusive Growth Efforts

1. 빈곤감소적 성장

Manmohan Agarwal (CIGI, visiting 선임연구위원)

□ 유럽 내 빈곤인구는 어디에 거주하는가?

- 국민들의 해외이주로 노동인구가 감소, 인건비 상승을 야기
- 국내에서는 지방 농업분야 종사자가 도시의 다른 산업으로 이동,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기계화를 바탕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 노동력 감소를 보완

□ 개발과정

- 개발 초기단계에는 농업분야에 비해 비농업분야의 노동 생산성이 높으며, 성장을 통해
- 초기에는 성장에 따라 산업별 생산성 간 차이가 확대되며,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를 전환기로 간주함.

□ 현 시점 개도국의 특징

-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간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각 개도국에 동일한 방식의 성장전략을 적용할 수 없음.
 -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음.

□ 개도국의 발전 프로세스

- 아시아에서 농업과 비농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며,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에서 농업은 증가, 비농업은 감소 추세
-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에서 농업은 증가, 비농업은 감소 추세
 - 동아시아와 달리,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아직도 농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성장 프로세스의 특징

-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개발패턴에 따라 발전(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산업화를 시작), 그러나 최근에는 비농업 분야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통해 개발을 시작하기 어려움.
- 동아시아 지역의 빈곤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이제 빈곤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제라고 간주할 수 있음.
-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노동인구 당 부가가치가 하락
- (빈곤층 감소를 위한 성장의 영향) 아프리카에서 1만큼 성장할 경우 0.07만큼의 빈곤이 감소
- 자유화 이후 더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한 것 때문은 아님.

□ 빈곤층에 도움을 주는 것?

- 성장, 빈곤감소적 성장,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켜왔으나 최근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동아시아의 경우 전쟁 및 혁명을 통해 토지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 빈곤 감소를 위한 토대가 됨.
-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층을 타겟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함.
- 교육과 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거버넌스가 요구됨.
 - 빈곤의 양상 중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영양실조와 모성사망을 해결해야 함.

□ 라틴아메리카의 빈곤

-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균등한 분배를 위한 노력으로 도시-지방간 격차가 작은 편
- 노동인구가 적으며, 인건비가 높은 편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짐.

- 노동집약적 제조업/소규모 농업은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빈곤감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요구됨.
- 두 종류의 특별 프로그램
 - (안전망 도입) 1,430만의 빈곤감소를 위해 6,530달러 지원, GDP의 0.16% 규모이며, 세입은 GDP의 20% 이상
 - (근로자 기술 개선) 임금이 향상될수록 근로자도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야 함. 전달·운송 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 아시아에서의 빈곤

- 동아시아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빠른 빈곤감소를 달성한 반면, 소득 불평등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확대됨.
- 동아시아에서 빈곤감축을 위한 해법은 비슷해 보임.
- 남아시아에서는 빈곤층에게 농사지을 토지가 제공되지 않는 등 자원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이 하락
 - 이는 농업이 다른 산업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농업에 활용할 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

□ 아프리카에서의 빈곤

- 아프리카는 빈곤이 가장 적게 감소된 지역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지난 30년간 대 아프리카 투자가 감소했으며, 20년간 GDP가 13%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성장이 뒤쳐짐.
 - 투자할 자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
- 최근에는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 추세를 지속시켜야 하며, 이를 가속화해야 함.
- 빈곤감소적 성장에 장애요소가 되는 소규모 자작농을 감소시키기 위해 토지매매 전략 활용

□ 경제위기의 영향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속도가 저하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10년에 걸쳐 회복에 달성
- 성장속도 저하는 빈곤 감소 속도를 저하시켰으며,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는 저속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은 97년에 비해 적은 편

□ 남남협력

- 무역 등 국제경제에서 남남협력 국가들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남-남 자금유동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남남협력국은 개도국과의 무역량이 많음.
- 남남협력 증진은 빈곤감축을 가속화하고 성장을 지속하는데 기여하므로, 적절한 기관을 통해 남남협력을 촉진해야 함.

□ 결론

- 빈곤감축을 위한 하나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문제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함.
-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주요자원은 지식이 되어야 함.
- 농업생산성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
- 빈곤층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요구됨.
- 보편적인 해법은 존재하지만, 이를 각 사례에 어떻게 응용하는가가 관건

2. 빈곤감소적 정책의 영향 (The Social Protection Thematic Window 사례, 교훈)

Thomas de Hoop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3ie)

-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영향평가는 정책과 연관된 이슈로, 평가를 위해서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

□ 브라질 인도 비교: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정책 영향평가

- 브라질은 낮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불평등도가 많이 개선된 반면,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빈곤 감소는 실망스러운 수준
 - 경제성장이 반드시 빈곤감소의 제1 지표가 되지는 않음.
- 브라질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인도는 사회 불평등도가 높음.
-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보호 프로그램(Latin American Revolution)
 -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현금지원(cash transfer) 프로그램을 수행, 빈곤감소의 성과를 거둠.
 - 브라질은 현금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family program을 수행,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멕시코에서도 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보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
- 인도는 브라질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 (Ravallion) 브라질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성공적 결과를 도출했으므로, 인도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
 - (DFID, 3ie) 그러나 발표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브라질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인도에서 성공을 거둘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
 - 종교, 카스트제도의 잔류 등 인도의 사회적 문제가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보다 빈곤을 감소시키기가 더욱 어려운 환경
- 인도 및 아프리카에서 어떤 종류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
 - 아프리카에서는 조건적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맡아 이행할 적절한 기관이 있는지 의문

□ Cash Transfer 프로그램 영향평가 (DFID, 3ie에서 실시)

-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 단순히 브라질과 인도를 비교하는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임.
- 또한 프로그램의 결과로 단순히 아이들의 취학률이 증가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을 배우고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인도에서 취학률 및 참석률은 매우 증가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음.
-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해짐.
- 정책결정자, DFID, 학자(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특정 프로그램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성공적 결과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는 이와는 다른 빈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빈곤감소적 성장 프로그램이 요구

5] Lessons from Asia's Experience on Pro-Poor Growth

1. 아시아 빈곤감소적 성장으로부터 얻은 교훈

Siriporn Wajjwalku (Thammasat대, 학장, 교수)

□ 빈곤감소적 성장 관련 주요이슈 2가지

- 불평등도 감소에 초점
 - 불평등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내부적으로 사회경제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수원국 내부적 문제에 공여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 빈곤 감소에 초점
 - 공여국이 수원국 각 가정의 빈곤감소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빈곤을 줄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여국 입장에서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둔 빈곤감소적 성장 프로젝트가 더 수월해 보임.

□ 일본의 태국내 빈곤감소적 성장 프로젝트 수행 경험

- 1990~2005년 동안 농업 및 지역개발 관련 26개 프로젝트 수행
- (목표) 태국 로컬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 개발원조 전달 및 활용의 과정에 로컬정부, 커뮤니티, NGO의 참여를 강화
 - NGO가 일본대사관에 연락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태국 로컬 커뮤니티의 권한을 향상, 참여를 증진

- (접근법 및 양상) 수요 중심적, 양자,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
- (프로세스) 프로젝트 계획·형성 → 이행 → 결과평가
 - 로컬주민 및 커뮤니티 대표가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찰
- (성과) 가계소득이 증가했으며, 각 가정과 로컬 단계에서 개발을 위한 지식을 창출하고 누적
 - 높은 부가가치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여 소득향상
- (과제) 프로젝트의 지속성 및 지역주민의 실질 참여도 향상
 - 현장에서 지역의 실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NGO의 역할이 중요, 정부, 공여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 프로젝트의 성과 및 과제

- 일본측에서는 프로젝트의 효과적 전달을 통해 태국 국내 개발 프로세스를 촉진했다고 평가
- 반면, 지역주민 중 다수가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음.
 - (과제) 지역기관의 능력개발, 파트너십과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대화 설계 및 선정 프로세스가 수반되어야 함. 또한 지역주민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고려해야 함.

□ 향후과제: 성장과 분배 혹은 불평등과 정책

- 빈곤을 감소하거나 불평등도를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케익을 크게 만드는가 혹은 케익을 평등하게 나누는가에 대한 논의
- 개도국의 불평등도 감소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구조를 재편성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재수립 하며, 정치적 의지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함.
 - 협력국은 개도국의 능력개발 및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신흥국은 협력국으로서 개도국의 빈곤감소 혹은 불평등도 감소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이 목표에 따라 개발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함.

- 불평등도 감소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개도국 지역 주민들의 요구(수요)와 협력국이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서로 부합해야 함을 강조

2. 중국의 포용적 성장과 빈곤감축

Yihuan Wang (중국 농업대, 교수), Taidong Zhou (아시아재단) 대리발표

□ 중국의 빈곤감소 개요

- (\$1.08 per day PPP 기준, WB 추정치) 1981년 빈곤발생률 63.76% → 2004년 9.9%로 감소
- (\$2.15 per day PPP 기준, WB 추정치) 1981년 빈곤발생률 88.12% → 2004년 34.89%로 감소
- 1990~2002년 동안 세계 빈곤인구 감소의 90%를 중국이 차지
- 중국이 중진국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4억 가량의 국민이 아직 빈곤계층에 머물러 있음.
- 중국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가 아닌 지방에 거주, 지방에 다수의 빈곤인구가 분포
 - 지방 절대빈곤 인구 관련, 1980년 약 2억 5천만에서 2008년 천 300만으로 감소, 동 기간 빈곤발생률도 3.4%에서 1.5%로 감소

□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 농업개발을 통한 빈곤감축(1970~80년대 중반)
 - 지역기반 기업이 농업을 통해 생산한 원자재와 자금을 활용하여 산업개발을 이룬 것을 감안, 경제성장 전반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간주
 - 당시 중국 대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 전체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촌의 빈곤 감소가 중요
 - 위 기간 중국은 가장 높은 농업성장률과 함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빈곤감소율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농업이 중국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빈곤감소를 위한 중요요소로 간주

○ 포용적 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 제도 및 정책

(1) 빈곤계층의 성장과정 참여를 목표,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

- "The State Council Leading Group for the Three West Areas Agricultural Development"를 구축, 5년 안에 3개 지역 주민들의 기아 완화를 목표로 "Three West Areas Development Program"에 착수, 1982~1992년 동안 20억 위안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투자
- 위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의 빈곤은 증가, 이를 위한 국가 정책이 도입
- 중국정부는 1984년 국가 전반의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긴급조치 문서를 발표, 3개 서부지역을 331개 자치군을 포함하는 18개 지역으로 확대
- 198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7 5개년 계획(1986~1990)에 18개 개발 지역을 포함, 중앙정부는 국가 빈곤감소 프로그램간 조화를 이루고 각 프로그램을 지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LGOP(Leading Group Offic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Development)를 설립

(2) 빈곤층이 개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전략과 정책 마련(1980년대 중반~2000년)

- 위 기간 중국의 빈곤감소 프로그램은 개발중심, 지역개발 접근법에 기반(지역산업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수입이 향상, 빈곤감소 대출 상환가능, 고용창출 가능)
- 1986~1993년 동안 80만 이상의 농장이 건설, 5만 이상의 지방기업이 세워졌으며, 10만 km의 지역 도로가 완공되는 등 지역 산업과 인프라 개발에 중점
- 1993년 8-7제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착수, 극빈곤 인구 7년 안에 8,000만명 감소를 목표로 함. 지방정부에 재정자금 배분 관련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분권화를 필요로 함.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 매칭 프로그램도 개발
- 2000년까지 지역개발 기반 빈곤감소 전략은 빈곤지역에 대한 투자증진과 인프라구축, 능력개발을 통해 전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활동에 빈곤층을 참여

(3) 빈곤마을 대상 빈곤감축 프로그램(2001~2011)을 통한 개발기회 접근성 동등부여

- 효율적 선정 메커니즘을 개발, 빈곤층에 자금이 적합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보장

- 빈곤감소 목표층을 국가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했으며, 빈곤층의 능력개발을 위해 ADB에 기술지원을 요청, top-down 방식에서 빈곤층 스스로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목표

(4) 지역 사회보장 프로그램

- (농업에 국가재정 투입) 2000년부터 빈곤층 대다수가 종사하는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농업에 대한 세금 전면폐지(2006년), 농업 보조금 확대
- ("New Rural Cooperative Health Program") 개혁정책을 통해 빈곤층에 제공하는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02년 "New Rural Cooperative Health Program"을 도입, 2009년까지 94%의 농민이 프로그램에 가입,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 (지역 의무교육 프로그램) 2004년 "two exemptions and one subsidy" 정책을 도입, 빈곤층의 수업료와 교육재료비 면제, 기숙사비 보조함. 향후 이 프로그램이 무료 의무교육으로 확대
- (지역 기초 생활수준 보장 프로그램) 2004년 도입, 2007년 전국적으로 확대
- ("New Rural Old Pension Program") 2009년 시작, 2012년까지 4천 5백만 지방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것 목표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국의 당면과제

○ 거시경제적 제한 및 소득 불평등

- 중국이 중진국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국제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 사회 고령화 등의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음.
- 도시-지방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국가 지니계수가 0.49를 기록, 중국이 향후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

○ 부적절한 빈곤선 지정으로 인한 도시 및 지방의 누락된 빈곤인구

- 2011년 11월 빈곤선의 상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대비 지방의 빈곤선이 여전히 낮은 수준
- 낮은 빈곤선으로 인해 지방의 빈곤을 과소측정,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상당수의 빈곤층이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정책적, 공공적 빈곤감축 자원 활용의 정당성 제기에 어려움이 따름.
- 도시-지방간 이중 빈곤선 구조로 인해 빈곤인구 누락 가능성

○ 소득 외 빈곤관련 문제

- 소득기준 빈곤선 이상의 많은 가구들이 소득 외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해 실질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사는 경우
- 보건과 교육이 주요 분야로 간주
- 의무교육이 아닌 경우, 비싼 수업료로 인해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빈곤의 변화

- 1억 5,00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소외, 이들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며 자녀들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지 못함.
-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다수의 농민들이 농경지를 잃게 됨.
- 새로운 직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습득 문제가 발생
-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소외그룹이 발생

□ 개도국을 위한 경험/교훈

○ population dynamics가 성장의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영향

- 중국의 인구정책은 1인당 성장률을 향상, 중국 빈곤감소 전반에 크게 기여한 반면, 불충분한 노동력 공급과 고령화가 향후 당면과제로 부각
-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에서 인구증가율 상승은 경제성장에 상쇄하는 것으로, 인구규모를 조정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빈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축할 것 제안
- 단, 중진국으로 전환하여 시기상조의 노동력 부족과 사회 고령화를 피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은 반드시 장기적 계획 하에 이행되어야 함.

○ 중국의 빈곤을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 요소는 농업의 발전

- 농업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인구가동이 발생, 자금도 농업에서 다른 산업(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서비스)으로 이동
- 농업기반의 포용적 성장은 성공적 개발을 위한 경로를 마련
- 빈곤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 농업이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 농업개발을 바탕으로 빈곤감소를 달성할 것 제안

○ 효과적, 발전 지향적 국가

- 중국은 국가 주도 하의 시장 중심적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을 달성

- 국가가 개발과정을 주도할 경우, 효율적 이행능력을 기반으로 지속적 개발, 빈곤감소 전략·정책을 사용
- 지방정부의 능력배양, 동료간 경쟁, 성과검토 메커니즘 구축을 정치적 이슈화, 책임을 부여
- 개도국 및 취약국의 경우, 빈곤감축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 탈피

- 높은 수준의 경제·사회 불평등은 성장과 빈곤감소를 저해
- 중국은 1970년 후반~1980년대 동안 불평등도가 낮았으며, 상당한 빈곤 감소가 이루어짐.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불평등도가 증가함에 따라 빈곤감소율이 상당히 저하

○ 인권기반 개발 접근법 요구

- 경제·사회적 빠른 전환으로 도시-지방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지방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함.
- 가구등록 시스템이 도시-지방 분열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 도시의 복지 시스템이 더 좋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
- 위 문제는 인권기반 접근법을 간과한 개발정책에서 비롯됨. 문제해결을 위한 높은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개발단계 전환기에 인권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할 것 제안

□ 중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

- 빈곤층에도 개발·성장의 이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시와 지방 통합 개발모델을 구축
- 빈곤층 국민들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와 지방의 빈곤선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빈곤층의 참여를 증진
- 중진국 함정 해결과 부합하는 지방의 빈곤감소 전략 수립
- 포용적 성장과 빈곤감소를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포함
 - 국제·지역 기구와의 협력강화, 글로벌 및 지역 공공재 전달 개선

- G20 프레임워크와 남남협력 패러다임을 활용, 중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다른 개발협력국과 연계, 협력하여 진행
- 개도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개발경험과 교훈을 활용한 기술전수 및 상호학습 수행

[He Wenping 교수 추가설명]

- 중국은 예전에 저소득국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빈곤층에 해당하여 지니계수가 매우 작았고,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음.
- 그러나 이제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기존의 개발방식으로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빈곤층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짐.
- 중국은 이제 전환기를 맞아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고, 대신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려고 함.
 - 부유한 국가의 빈곤한 국민이 아닌, 부유한 국가의 부유한 국민이 목표
- 중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에 먼저 주력하고 그 다음 단계로 복지와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개도국이 이 절차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개발의 초기 과정에서부터 분배를 고려할 수 있음.
-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주력산업 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분야에 spill over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임.
 - 중국의 경우는 제조업을 통한 개발정책을 활용
- 개발을 위해 경제성장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개선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임.

3. 한국의 빈곤감소적 성장 경험: 광범위 개발 vs. 친빈곤층 타겟팅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빈곤감소적 성장은 poverty reducing growth(빈곤감소적 성장)와 poor favoring growth(친빈곤층 성장) 두 가지 개념이 있으며, 포용적 개발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

□ 정책적 이슈

- 수직적 접근법과 수평적 접근법 중 어떤 접근법을 활용할 것인가?
 - 빈곤층을 타겟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빈곤층의 자립적 지속가능 성장 달성능력을 배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여러 소득계층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평등하게 소득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 둘 다 추구되어야 할 것임.
- 산업 발전전략과 관련, 많은 개도국들이 농업에 주력하는데 다른 산업도 발전시켜야 함.

□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 부패 등 정부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최소화하고, 혁신과 조화를 추구
- 외부로부터의 충격완화를 위해 재정정책, 금융규제, 유동적 조정가격 마련
- 개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부가가치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능력을 양성, 확대
- 부가가치 상승
 - 개도국은 보통 낮은 인건비로 비교우위를 지녀, 가치사슬 중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산업화를 시작
 - 많은 개도국이 제조업, 경공업에 머무르고, 일부만이 R&D와 마케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정보와 인센티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
- (인적자원개발) 소득이 높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인적자원개발을 달성
- (사회통합) 개발자원에의 접근성에 따라 사회 불평등도가 변화

	정책 과제
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재정마련
	국제무역
	산업고도화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개발
리스크 관리	거시경제적 안정
	금융규제
	사회통합
중요요소 강화	거버넌스 및 제도
	지식에의 접근

□ 빈곤에서 번영으로: 한국의 경험

- 개발초기 대부분의 인구가 지방에 거주, 농업에 종사함.
- 한국은 빈곤감소적 성장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농업 대신 수출주도 전략산업에 주력
- 개발과정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
 -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번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
- 한국은 50년대부터 교육을 중시하며 인적자원양성을 위해 노력
 - 토지개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음. 이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고,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 대외원조 자금을 수출주도 전략산업에 활용, 이를 기반으로 원조에서 벗어나 양허성 차관으로 전환
 - 원조자금의 일회성 소비를 지양하고, 자립적이며 지속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자금을 집중
 - 일본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및 포스코 수립 등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함. 이는 많은 국제 원조제공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이었음.

○ 제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점분야

- 식량 자급자족, 조립 및 해양개발 달성
- 화학, 철강, 기계 산업 증진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마련, 생산성 증가
- 수입대체 정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 7억 달러 수출 목표
- 고용을 창출하고, 산아제한을 통해 인구증가 저지
- 농업다각화를 통한 농민 소득향상 추구
- 과학, 기술, 경영개선 및 인적자원 배양

⇒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식량안보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도시-지방간 소득격차 확대 및 수출품에 국산 부품사용률이 낮음을 염려하였음.

⇒ 한국은 투자가 어려운 환경을 갖추고 있었지만, 수출주도 산업화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산업을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함.

○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 수출주도 정책으로 인해 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 농촌의 소득이 도시의 2/3에 불과했음.
-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을 감안, 70년대부터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
- 새마을운동 전에 시행되었던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개발에 동참하려는 의식이 없어서 실패함.
- 새마을 운동은 top-down 방식이 아닌, 각 마을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마을 주민들을 고무할 수 있었음. (근면, 자립, 협동 강조)
- 특히, 마을별로 경쟁구도를 형성, 다른 마을로 현장학습을 가도록 하여 성장이 느린 마을로 하여금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도록 유도
- 정부에서는 각 마을의 개발성과에 따라 시멘트 등 원자재를 제공, 새마을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함.
- 새마을운동은 녹색혁명 등 다른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됨. 쌀의 종자를 개선했으며 dual grain price 시스템을 적용, silver revolution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가함.
- 새마을운동 및 농업생산성 증가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 소득 불평등도가 감소

- 산업고도화와 국내에서의 연계
 - 산업고도화를 위해 국내 가치사슬에서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 국제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 기존에 중간재는 주로 수입품을 활용했으나 기술습득, 인적자원개발 및 최적규모 공장설립을 통해 현지화를 추구
 - 긍정적 spill over 극대화를 위해 국내 산업 연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에서 혁신을 중요하게 인식, R&D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킴.

□ 한국의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

- 빠르고 회복력 있는, 공유된 성장을 위해 발전 지향적 정부가 요구
 - 국가 개발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국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근대화 달성, 개발문제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요
- 성과중심 접근법 사용
 - 개발 이론에서 강조하는 기성모델 대신 실용적 정책을 도입하고 피드백을 반영
- big-push 파트너십: 정보와 리스크 공유
 - 정부와 민간 간 공유된 정보와 인센티브,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부패와 지대추구를 방지함.
- 수출중심 정책: 규모의 경제 활용,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함.
- 외부지향적, bottom-up, 통합적 산업정책
 - 국외 벤치마킹을 통해 잠재적 비교우위를 발견
 - 국내 가치사슬에서 누락된 것을 찾고 quality ladder에서 상위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연구수행,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축적을 통해 모방에서 혁신으로 전환
- 내부지향적, top-down 산업정책
 - 대규모 spill over와 함께 가치사슬에서 산업의 고도화 추구, top-down 방식으로 피드백은 반영하지 않음.
 - 수요불충분, 높은 비용, 기념비적 프로젝트의 소지 등 문제

⇒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소득분배는 한국정부가 주력했던 분야는 아니었으며, 한국정부가 활용했던 성과중심의 경쟁구도 체제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됨.

⇒ 한국은 주인의식을 갖고 수출지향 산업화 달성했으며, 자체적 개발 능력을 함양하여 고부가가치를 달성함. 이로 인해 대외 경제에 크게 연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었음.

[회의 사진]



1 Post Busan Reflection

1. 부산 HLF4에 대한 브라질의 관점

Carlos Duarte (주인도 브라질 대사)

□ HLF4의 의의

-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 광범위한 시각에서 효과적 개발에 대해 논의함.
- 국제적 논의를 통해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인정
 - 남남협력은 브라질에서 추구하는 기술협력과 같은 맥락의 국제개발 협력 방식

□ 브라질의 남남협력

-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제공
 - 협력국과 대상국간 상호이익과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남남협력 수행
- 협력대상국의 국가 개발정책 우선순위를 중시하고, 대상국의 주인 의식과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능력개발을 목표로 함.
 - 개도국 국내의 문제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도국 능력개발을 위해 기술협력 수행 시, 노하우 전수의 비용효율 증진
- 남남협력은 원조의 한 형태가 아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비 조건적으로 수행되며, 브라질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브라질의 개발과정에서 겪은 성공적 경험을 활용,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개발환경을 지닌 개도국에 이를 공유

□ 브라질의 개발협력

- 브라질은 자국을 새로운/신흥 공여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남남협력국이라고 간주

- 개도국에 주로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장학금을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각 국가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제공
- 일본, 독일, 국제기구 등과 삼각협력 수행
 - 최근 WFP와 FAO와 아프리카에서 food purchasing 프로그램 수행

□ ABC: Brazilian Agency for Cooperation

- 브라질 외교부에 소속, 브라질의 모든 개발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 수행
- 정부는 개도국에 위치한 브라질 대사관을 채널로 하여 개도국 로컬 정부와 의사소통을 추진
- 최근 ABC는 여러 개도국에서 농업, 보건, 교육, 능력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이행
 - 그동안 e-거버넌스, 기업가정신, 바이오연료, 환경 등 분야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음.
- ABC에서 수행하는 남남협력은 산업분야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다각적 측면에 걸쳐 이루어짐.
- ABC 프로젝트는 협력국간 수평적 관계를 추구, 개도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
- 최대 협력대상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아프리카 외 아이티, 동티모르 등 소규모 취약국가를 중점국가로 간주
- 양국 고위급 인사의 서명을 통해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 ABC의 예산은 3,000만 달러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많지 않은 금액
 - 2006년 이후 거의 3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
 - 브라질의 협력자금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음.

□ 결론

- 부산 HLF4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리이며, 향후 어떻게 남남협력을 수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제시됨.

- 브라질은 남남협력을 주요 개발협력 방식으로 활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제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 브라질 자국의 개발을 위해 고안해낸 개발해법을 개발협력에 활용할 수 있음.
- 브라질도 같은 개도국으로서, 개도국이 마련한 개발해법은 다른 개도국이 적용하기에 더욱 적절하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

2. Key Outcomes of the Busan Forum & Tasks Ahead

박은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부산총회의 주요결과 및 중요성

- (배경) 국제개발논의의 변화에 따른 교훈
 - 원조는 중요하지만 한정된 개발자원에 불과하며, MDGs달성 및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발의 영향과 성과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 개발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개발 이해관계자간 협력과 연계가 중요함. 또한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신흥경제권의 역할이 증가
 -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정세와 각 국가의 다양한 개발협력 접근법을 인식, 적용(기존의 one-size-fits-all 접근법 지양)
 - 공여국 측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성과 및 파트너십을 위한 원조효과성 논의는 역학적 측면 대신 정치적 참여가 더욱 필요함.
 - 부산총회는 개발협력에 대해 논의한 정치적 행사로 정부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 160개국 약 100명의 장관, 30개 국제기구 수장 참석/UN·OECD 사무총장, 르완다 대통령, 에디오피아 총리, 힐러리 클린턴 등 VIP 참석/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주요 G20 신흥국 참석
 - 100명의 의원, 300개 CSO기구, 100명의 민간부문 대표 참석
 - 부산총회 결과문서(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정치적 서문) 모든 개발 파트너들이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공유된 원칙*에 대해 합의, 각 개발 주체들의 차별성과 전통 개발원조에 대한 남남협력의 보완성을 인정
- * 주인의식, 성과주의,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책임성

- (파리선언·아크라행동계획 심화) 투명성, 예측성, 개발성과를 제고하고, New Deal을 지원하여 개발협력에 취약국을 연계함. 또한 원조분절 방지, 양성평등·여성역량강화를 강조하며, 의회 및 지방정부, CSO의 역할이 중요함을 명시
- (효과적 개발협력) 효과적 제도·정책 수립, 남남·삼각협력 활성화, 부패 척결, 기후변화재원
- (포스트 부산 메커니즘) 개도국 중심의 접근법 추구, 부산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OECD-UNDP 합동체제운영, 2012년 6월까지 부산선언에서 합의된 사항 이행점검

○ 8개 Building Blocks 및 글로벌 동맹 채택

- Building Blocks: 1)취약국내 협력을 위한 New Deal, 2)효과적 제도에 대한 합의, 3)성과주의 및 책임성, 4)투명성, 5)기후변화재원, 6)다양성 관리 및 분절화 감소, 7)남남/삼각협력, 8)포용적 지속 성장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확대 및 강화
- 젠더 이니셔티브: 'Joint Action on Gender' 자발적 글로벌 동맹 채택

○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으며, 한국은 협상과정을 통해 전통공여국과 신흥국간 가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등 주최국으로서의 성과를 거둠.

- 부산총회를 통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Aid and Beyond'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 이행을 위한 체제로 기존 OECD 중심체제에서 OECD-UN 합동지원체제로 변화

□ 부산총회 후속논의

○ 주요 이슈 및 이행 기한

- 2012년, 비구속성 원조를 위한 노력 가속화 점검
- 개발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재원관련,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공개(전자적 방법)를 위해 공통·공개된 표준을 마련할 것임. 2012년 12월까지 동 표준에 합의, 2015년 12월까지 전면 이행 추진
- 개발재원의 예측가능성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개도국에 정기적이며 시의적절한 3~5년 연동 예산안 및/혹은 이행계획을 제공
- 2012년 말까지 공동의 노력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다자협력 채널(다자개발은행 등)의 확산 조질

- 2012년 말까지 불충분한 지원을 받는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방향 설정 원칙에 합의

- 포스트 부산 이행체제

- 2012년 6월까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제·지역적으로 이행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및 목표 마련에 합의
- 또한 2012년 6월까지 부산 파트너십의 light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 동 운영방안은 파트너십의 구성원, 각료급 인사의 정기적 참여방안, 다른 개발협력 포럼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

□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BIG: Post Busan Interim Group)

- 의장 및 세르파 25명(공여국, 개도국, OECD, UN, 국제의원연맹, 시민사회)으로 구성
- 제1차 회의(2012.2.13~14)에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운영 원칙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이행 지표 및 모니터링 체제에 대해 협의
- 제2차 회의는 파리(4.4~5)에서, 제3차 회의는 제네바(5.17~18)에서 개최될 예정, 온라인을 통해 자문을 받을 예정
- 2012년 6월 원조효과작업반(WP-EFF) 회의에서 결정될 사안
 - 부산 파트너십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최종 합의
 - 거버넌스 구조의 권한 및 멤버십, OECD-UNDP 공동 사무국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단계의 지표 및 목표
 - 국가·글로벌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노력을 서로 연계하는 프로세스
- * 부산총회 결과에 대해 UN은 동 총회를 통해 포스트 부산 이행과정에 UN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2012년 UN 개발협력포럼(DCF)과의 연계를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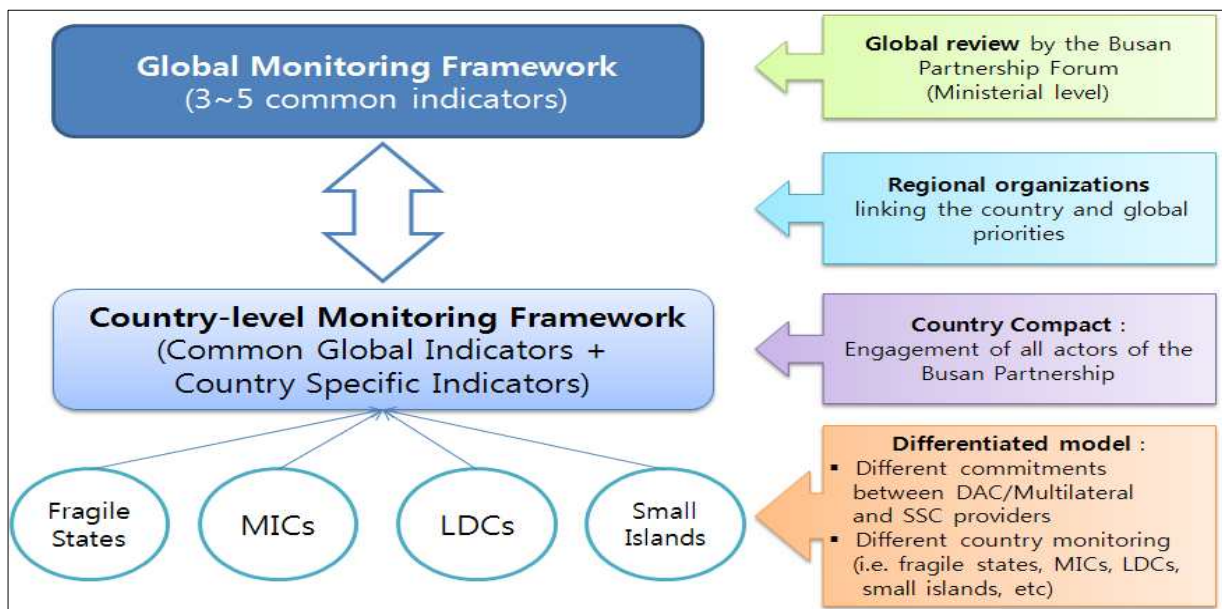
□ 포스트 부산 관련 고려해야 할 이슈

- 정기 각료회의

- 부산 파트너십 결과문서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와 기구를 포함해야 하며, UN·OECD 포럼과 연계하기 위해 고위급의 많은 회의 일정을 고려해야 함.

- 회의 주기(연례/2~3년에 한번 등)에 대한 논의 및 지역기구 역할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 운영위원회 구성
 - 20~30여개 국 참여, 장관급 회의 개최 준비 및 글로벌 파트너십의 전반적 운영 협의
 - OECD-UN 공동 사무국 관련이슈
 - UN의 역할 및 UNDP와의 연계에 대해 논의, 향후 OECD와 UN 양 기구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
 - 글로벌 모니터링
 - 새로운 방법론과 지표 도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기존 파리선언 원칙을 간소화, 활용하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함에 합의
 - * 파리선언 지표 중 일부는 지속될 가치가 있으나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으므로 간소화될 필요
 -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는 3월 중순에 도출될 예정
 - * 포스트 부산 모니터링 설문조사 잠정결과 별첨
 - 국가 단계(수원국 현장)에서의 모니터링
 - 부산선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본으로 수원국 주도 하 자국의 적합한 지표 및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 글로벌 모니터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
 - 남남협력 파트너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이슈
 - 다양성과 자발성이 남남협력의 주요 특징임을 감안, 포스트 부산 체제에 남남협력 국가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
 - 보편적 모니터링 필요성(수원국 및 일부 선진공여국 주장) vs 차별성과 자발성을 중시하는 정책대화 및 지식공유(한국, DAC 의장 등 주장)
- 부산 모니터링 체제에 대한 한국의 제안
- (글로벌 모니터링)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3~5개 공통지표 설정, 각료급 회의를 통해 이행 점검
 - 지역기구는 글로벌 모니터링과 국별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국가 단계 모니터링) 각 국별 상황(취약국, 중진국, 저개발국, 소도서국가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국별 지표를 설정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명시된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 수원국 정부가 주도하는 'Country Compact'을 통해 결정
 - 수원국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개발협력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각기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임.
- (남남협력 파트너 국가) 자발적 지표선택을 통해 글로벌 모니터링에 자발적으로 참여



[첨부] 포스트 부산 모니터링 설문조사 잠정 결과

※ 23개 국가/기관 참여

모니터링 대상 분야	제안 국가/기구	비고
Transparency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사모아(태평양), 미국, 방글라데시, 르완다, EU, Nordic+, UNDP/UNDG, WB, IPU, IATI, Oxfam, BetterAid(BA), Publish What You Fund(PWUF)	18
Focus on Results	캄보디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u>한국</u> , 사모아(태평양), 미국, EU, Nordic+, UNDP/UNDG, IPU	13
Use of Country system	캄보디아, 독일, 사모아(태평양), 투발루, 방글라데시, 르완다, EU, Nordic+, WB, Oxfam, BA	11
Accountability	영국, 독일, 팔레스타인, 사모아(태평양), 방글라	11

	데시, 르완다, EU, Nordic+, UNDP/UNDG, IPU, BA	
Aid Fragmentation	캄보디아, 캐나다, 독일, 투발루, 미국, 방글라데시, 르완다, EU, Nordic+, Oxfam, BA	11
Predictability	캄보디아, 캐나다, 사모아(태평양), 방글라데시, 르완다, EU, Nordic+, WB, Oxfam, BA	10
Untying Aid	캐나다, 영국, 방글라데시, 르완다, Nordic+, WB, Oxfam, BA	8
SSC/TC(Knowledge sharing)	캄보디아, 노르웨이, 한국 , 투발루, 방글라데시, 일본, Nordic+, UNDP/UNDG	8
Private sector	독일, 한국, 미국, 방글라데시, 일본, EU, UNDP/UNDG	7
CSO's role	사모아(태평양), 투발루, 미국, 방글라데시, 르완다, Oxfam, BA (팔레스타인 불분명)	7
Ownership	영국, 노르웨이, 미국, EU, Nordic+, UNDP/UNDG	6
Gender equality	한국 , 사모아(태평양), 미국, 방글라데시, BA	5
Fragile states	캐나다, 프랑스, 독일, 팔레스타인, BA	5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프랑스, 한국 , 일본	3
Parliament's role	사모아(태평양), IPU	2
PBA	캄보디아, BA	2
Climate change finance	투발루	1

3. 부산 HLF4에 대한 인도의 입장

Ravi Bangar (인도 외교부, Joint Secretary)

- 인도는 부산 HLF4에 참석했을 때 효과적 제도·정책, 개발구조, 포용적 파트너십에 대해 합의
- 현재 국제적으로 원조효과성을 평가하는 많은 현장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기관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을 조율, 평가할 수 있음.
 - 현존하는 기관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개발지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 및 UNDP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효과성 평가 프로젝트 수행

- G20도 국제 무역, 노동, 고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으로, 원조 효과성작업반을 대신하여 G20을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협의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단계 현존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
 - 새로운 기관을 형성할 경우 기존기관과 그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순 모방에 그칠 가능성
-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능력개발이 요구
- 개발원조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데, 개도국 내 개발협력 활동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임.
- 개발 패러다임 전환
- 부산 HLF4에서 공여국과 개발파트너들은 국제원조 거버넌스 및 효과적 개발에 대해 많은 논의
 - 국제개발원조 패러다임이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로 전환
- 모든 개발파트너들이 한 가지 플랫폼에 포함, 부산선언 결과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보편적 공동된 원칙추구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안에서 차별화된 개발협력의 요소를 활용해야 함.
 - 북남협력 뿐 아니라 남남협력의 방식도 활용
 -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부산선언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며, 개도국이 중심이 되어 남남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해야 함.
 - 개도국은 자국의 개발정책과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수행
 - 구속적이고 속박적인 접근법을 지양하며 모든 개발주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
- 향후 개발협력
- 이행을 위한 의무 및 책임은 공동된 것이지만, 차별화된 방법이 요구
 - Beyond Aid를 추구하며 인적자원개발 강조
 - MDGs 달성 기한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음을 인식, 노력을 촉구

- 획일적 접근법(one-size-fits-all)에서 탈피, 남남협력과 같이 협력국과 협력대상국이 상호작용하는 방향 추구
- 부산선언 이행체제에서 개도국의 수요를 인식하고 존중
- 개발협력 및 원조를 통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
-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원조 효과성에 대한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하여 교훈을 도출

4. 부산 HLF4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입장

Metasebia Tadesse (주인도 에티오피아 대사관, Minister Councillor)

- 부산총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 남남협력국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계기가 됨.
 - 개도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관례적 기술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원조효과성 관련 정치적 고려사항에 주목
 - 개발원조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 개발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남남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 방식 및 접근법에 대해 논의
- 에티오피아의 개발
 - 에티오피아에서는 인도와의 개발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
 - 양국의 개발협력은 원조제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에 중점을 두었음.
 - 그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선진공여국으로부터 받은 개발원조 자금은 기본 의료서비스, 초등교육 등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큰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사회 서비스 개선 외,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이 필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요구

□ 개발원조에 대한 제안

- 개발원조는 사용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비효과적일수도 있으므로, 양질의 원조를 추구해야 함.
- 아프리카의 빈곤을 감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지원
-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철도건설,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 주목
- MDGs 달성을 위해 안보, 능력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취약국을 지원
 - 취약국의 경우 능력개발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 부산 파트너십은 남남협력과 신흥공여국을 강조하며,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부각하고, 국제 개발 패러다임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

- 원래 HLF4는 원조효과성 달성을 위해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회의로 추진
-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남남협력을 추구하는 공통된 원칙을 마련
- 취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및 원조 투명성 강조
- 개발효과성 주목
 - 원조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효율성이 제고되는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개발효과성의 중요성을 강조
 - 결과중심 개발협력을 중시, 개발 및 원조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강조

□ 개도국의 주인의식: 에티오피아 사례

- 에티오피아는 자체 중장기 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과 전략을 수립, 산업부문별 전략을 집중적으로 이행
 - 지난 8년간 GDP 11% 성장을 달성, 2025년까지 중진국으로 변모하는 것이 목표
- 개발원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의 흐름을 감독
- 정부가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
 -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육, 보건, 식량안보 등의 분야에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받음.

- 원조효과성은 필요하지만 개발을 위한 충분한 요소가 되지는 않음을 강조
- 에티오피아와 인도의 개발협력은 에티오피아의 개발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 부산총회를 통해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외원조 자금 보다는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개발을 달성하고자 함.
-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효과적이고 에티오피아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니셔티브를 도출할 것임.

② Capacity Development and South-South Cooperation

1. 남남협력: 인도 외교정책의 전통적 필러

Pankaj Sharma (인도 외교부, Joint Secretary)

- 기술 · 경제 협력
 - 인도 기술 · 경제협력은 남남협력의 프레임워크로 확장
 - 공유,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
 -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협력
 - 개도국 주인의식을 최우선으로 고려
 - 수요중심, 대응력 지향의 능력배양 추구
 - 1964년 인도정부에 의해 양자 프로그램으로 시작
- ITEC(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Programme) 소개
 - 교육 프로그램
 - 직업훈련, 기술력 제고, 능력배양을 목표로 하며, 다자기구 참가자로 구성
 -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 환경 및 재생에너지, 여성역량강화, 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기술, IT 및 영어, 운영 및 관리, 금융 분야 프로그램 수행

- 인도 전문가 사절단으로 파견
 - 인도 전문가들을 ITEC 파트너 국가의 요청에 의해 파견, 개도국의 주요 제도구축에 기여
 - IT, 의료, 농업연구, 해충관리 등
- Study Visit
 - 파트너 국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Study Visit 수행
 - 2~3주간 개발관련 주요 기관, 교육센터 등 방문
- 재난극복 지원
 - 식량, 의료물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협력을 수행하며,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도 지원
- ITEC은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성공적 사례로서 다른 파트너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은 인도와 파트너국가 간 협력에 대한 공통된 의식을 유도
 - 인도 또한 파트너 국가로부터 받는 피드백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 상호학습을 할 수 있음.

2.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 파트너십 기구

Jitendra Hargovan (남아프리카 공화국 National Treasury, 선임 기술자문)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발협력

- 신흥공여국이 아닌 개발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아젠다와 지역통합을 지원
 - African Renaissance vision 및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지원
- 남남협력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펀드 등을 통해 다각적 협력 채널에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개발 아젠다를 지지
 - 남남, 북남, 삼각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 파트너십을 형성
- (한계점)전략적 프레임워크가 결여
 -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활동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절화 되어있으며, 미봉책인 경우가 많음.
 - 개발협력에 대한 정부 전략 및 공식적 운영지침이 결여

-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활동을 수행, 역량개발을 추구
- 제도구축, 능력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이 요구됨.

□ SADPA(South African Development Partnership Agency) 프로젝트

- 구성
 - 예비조사, ARF Bill 평가 및 새로운 Bill에 대한 초안 제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
- 기관의 특성
 - 외교부의 일부로 소속되어 국제관계개발부(DIRC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에서 결정한 개발협력정책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협력활동을 이행
 -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펀드의 관리와 행정을 담당
- 주력분야
 - 강력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학습을 강조
 - 프로젝트 개발, 이행, 조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향후 3~5년 동안 제도수립 및 자원역량 강화 목표
- 기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대외 개발협력 활동 및 지원을 관리하고 감독
 -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형성 시 조화 방안을 모색, 정부의 정책 이행에 일관성을 추구
 - 프로그램·프로젝트 설계, 준비, 수행 및 감독,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 파트너십 펀드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
- 전략적 접근법
 - 대사관과의 협력 등 조직의 구조를 활용
 - 감독 및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협력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 정치, 경제관계 강화 추구
 - 양자관계 협력의 경우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공유
 - IBSA 및 BRICs를 등 현존하고 있는 파트너십과의 남남협력을 수행
 - 주인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며, 국민 중심의 개발접근법을 활용

○ SADPA의 미래

-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 운영 완성
- 연계와 공유를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 중복된 노력을 피하고자 함.
- 국가의 '전환계획'에 따른 활동 이행
- 학습을 통한 발전을 추구

3. 남남협력과 학계간 연계

Ifar Subagiyo (인도네시아 Brawijaya대, 교수)

□ 배경

- 최근 개발달성을 위해 능력개발이 중시되고 있으며, 능력개발에 저해되는 요소는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로 작용
- 그동안 개발협력에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학계(HLI: 대학, 연구소, 폴리테크닉)의 잠재력이 과소평가 됨.
- 개발을 위해 고등교육이 요구
 - 지역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의 질적 향상을 추구
 - 학계의 참여 하에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등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
 - 지역개발을 위해 글로벌 지식을 활용, MDGs 달성에 기여

□ TT-SSC(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to Bangkok Call

- Bangkok Call: Southern Academia as a Learning Partner in Knowledge Exchange
- Brawijaya 대학은 TT-SSC를 지원하여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남남협력 프로그램에 기여하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남쪽 국가들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
 -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2개 대학을 대표
- 연구결과
 - 지식공유 프로젝트의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사전 수요평가가 부재함.
 -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간 정책대화 마련이 필요

□ 지식격차 완화: Southern Academia

- 많은 개도국에서 지식과 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Southern Academia의 관심이 매우 높음.
- 모든 개발단계에서 지식과 교육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진국에서는 매우 중요함.
 - 중진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 및 지식을 갖춘 기업가 및 전문가가 필요
 - 양질의 연구와 혁신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 학계,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지식공유 및 상호학습에 대한 인식이 강화

□ 인도네시아 Brawijaya 대학

- Bangkok Call의 영향으로 2011년 11월 RC-SSC(Research Center for South-South Cooperation)를 설립, 기술협력의 확산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7개 연구분야: 식량안보, 빈곤과 부패와의 전쟁, 개발에서의 사회적 소외, 인구과잉,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국제인권 및 법 시행
- 정부, 공여국 기관, 대학, NGO 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South South Forum을 개시
 - 커뮤니티,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원하여 그들이 주요 남남협력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무
 - 개발협력의 여러 양상을 개발하기 위해 중심적 역할 수행
- 커리큘럼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 고등교육기관(HLI: High Level Institution)들의 공동연구를 위한 플랫폼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

- 남남협력 개발을 위한 주체로서 그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려
 - 남남협력이 북남협력에 비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HLI에서 기여할 것이 요구
 - 학생 및 학자들의 다문화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간 교류 추진
 - HLI 공동연구의 결과물이 기술적 지식과 문화,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간주
- RC-SSC(Research Center for 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
- 아시아태평양 HLI 포럼 설립은 필수적 요소로 간주
 - 남남협력을 지원을 위해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포럼 설립을 위해 재정적 문제도 간주해야 함.
 - 공여국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향후 과제
- 아시아태평양 대학들간 협력과 교류는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지식 사회를 양성하기 위한 주요 아젠다로 간주해야 함.
 - Brawijaya 대학의 RC-SSC는 2012년 10월에 첫 번째 SSAPUF(South-South Asia Pacific University Forum)을 소집하는 이니셔티브를 수립
 - 남남·북남 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아시아태평양 대학들간 협력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 모델 모색
 - 아시아태평양 대학교 협회와 대학들간 정책대화를 마련
 - 학계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이디어 공유
 - 학부, 대학원에서 이해와 교류 증진

4. 남남협력: 향후과제

Natalie Shobana Ambrose (말레이시아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애널리스트)

- 말레이시아 MTCP(Malaysian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소개
 - (목표) 말레이시아의 개발경험을 다른 개도국과 공유, 개도국들과의 양자 관계강화, 남남협력 촉구
 - (양상) 단기 전문코스, 장학금 지원 등 장기코스,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 등 운영
 - (집중지역) ASEAN 지역에 대한 활동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 그 다음이 아프리카 지역임.

- 원조효과성 맥락에서 남남협력의 도전과제
 - 원조효과성 원칙 적용
 -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인의식과 상호 책무성 강화
 - 능력개발을 위해 남남협력에서 정보운영과 투명성 강조
 - 원조효과성 아젠다 강화
 - 상호학습을 통해 기후변화 등 개발과제를 인지
 - 남남기술협력 및 지식공유의 효율성과 인센티브 제고
 - 북남협력과의 보완적 관계 보장
 -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삼각협력 추진
 - 상호학습과 지식공유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적, 글로벌 메커니즘 수립

- 원조효과성 개선방안
 - 능력개발을 위한 계획 및 전략수립
 - 영향평가 실시
 - 개도국이 중시하는 개발주제, 지리적 특성, 문화,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 개발기관 자동화
 -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훈련

- 개도국 국민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활동의 질, 효과성,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책임감 있는 개발협력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이라고 간주

③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1.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의 접근법: 한국의 관점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법

○ 역사적 배경

- 아시아는 중국, 인도, 캄보디아 등을 중심으로 고대에 선진문명을 발전
-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등 국가적 모욕을 경험

○ 아시아 국가들의 재기

-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비교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성공, 성장을 달성했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은 실패
- 동기간 라틴아메리카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아프리카는 정체

○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방향

- (내부개혁) 사회통합개선 및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개혁을 수행, 대외협력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제 세력균형에서 지역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음.
- (대외협력) 대외적으로 국제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차지, 협력을 달성하였으나 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됨.
- (내부개혁+대외협력) 국내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국제 역학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여 Asian Century를 전개
- (내부개혁 및 대외협력 실패)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국제 역학관계에서 피지배의 위치에 놓이게 됨.

○ 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공통점

- 원조보다 개발협력을 중시, 공여국과 수원국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협력국으로서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함.
- 어떤 국가도 원조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부유하지 않고, 원조를 받을 만큼 충분히 빈곤하지 않다고 생각

- 기본 인간육구 충족 보다 능력개발을 중시, 자립적 지속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협력을 수행
- 개도국의 역량개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무역, 기술, 인프라 분야를 지원
-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고 개발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정부 강조
- 개발협력 양상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공유, 활용하여 개발협력을 수행

□ 수원국으로서 한국의 개발·원조 경험

- 한국은 성공적 원조 수원국으로 간주되나 50년대에는 모두 희망이 없는 수원국이라고 생각
-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원조로부터 탈피를 추구
- 원조 및 기타 해외자금은 체계화된 계획 하에 활용
 - 한국은 대외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포스코 및 KIST를 설립하여 자립적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 결론

- 개발원조 아젠다 전개
 - 'more aid' → 'better aid' → 'beyond aid'로 전환
 - 한국은 HLF4의 주요 주제를 'beyond aid'로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원조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aid and beyond'를 주요 주제로 설정함.
 - 원조효과성에 대해 1) 원조의 특정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조화 등 원조 전달 운영체계를 통해 원조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2) 개발의 한 수단으로서 원조를 간주하고 그 목적을 설정, 원조를 통해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
 -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player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임.
-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지향정책을 도입하여 성장

-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 정부 정권의 종류는 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며, 단지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
- 한국의 개발이 독재정권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평이 있지만, 한국은 민주화 달성 이후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

2. 변화하는 국제개발원조 체제에서 중국의 접근법

Xiaoqing Mao (중국 통상부, Associate Research Fellow)

□ 주요 개발주체 구분

- DAC 회원국은 명확하게 그룹으로 구성, BRICs 국가들은 DAC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요 개발협력국으로 신흥공여국이라고 간주됨.
- 그러나 중국은 자국을 공여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남남협력 등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협력국이라고 간주

□ 국제개발원조 체제 변화

-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원조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DAC 공여국이 여전히 주도적 입장을 지니고 있음.
- 신흥국의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모하는 등 DAC 비회원국이 주요 개발주체로 부상하고 있지만, 주로 해당국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등 한정된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
- 신흥국 외 NGO, 민간분야의 개발협력 활동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중국의 개발협력 접근법

- 중국 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 평등 및 상호존중, 상호이익 및 공동개발을 추구하며, 이는 아직 개발과정에 머물러 있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해당되는 내용

- 프로젝트 원조에 주력
 - 중국 대외원조 예산의 40%를 프로젝트 원조가 차지
 - 양허성 차관 중 다수가 프로젝트 원조를 지원하는데 활용
 - 2010년 중국은 63개 complete project, 44개 양허성 차관 프로젝트 지원
 - 다른 남남협력국가들은 기술협력에 치중하는 경향
 -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여 협력활동 수행
 - complete project 중 경제인프라, 농업 및 산업관련 프로젝트가 60% 이상이며, 양허성 차관 프로젝트 중 80% 이상이 경제관련 프로젝트
 - 개도국 수요 중심의 협력을 추구
 - 양자협력에 주력
 - 대외원조의 약 90%를 양자 채널을 통해 제공
 - 원조와 무역, 투자를 연계
 -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 운영
 - 아프리카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특별 loan을 마련
 - 경제·무역 협력지역을 설정
- 부산총회 이후 숙고해야 할 문제
- 참가자들은 총회의 결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 파트너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음.
 - 파트너십에 대해 얘기하는 것 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China DAC 스터디 그룹에서는 beyond aid를 추구하기 위해 원조와 무역, 투자를 연계할 것을 제안
 -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을 동원
 - 삼각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며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 부산총회에서 도출된 공통된 원칙과 차별화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함.

3.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의 접근법: 인도

Sachin Chaturvedi (RIS, 선임연구위원)

□ 아시아 개발협력국의 공통된 문화로부터 공통된 개발협력 특징이 산출

- 연민, 친절, 공존의 문화
- 특징
 - 정부주도적 개발과정
 - 산업화 전략, 무역 활용
 - 기술협력,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개발경험 공유
-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아시아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 구체적 개발협력 접근법 및 전달체계가 상이

□ 남남협력의 특징

- 남남협력국은 개도국의 기술과 지식에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을 개발, 국민 중심의 개발을 달성해야 함.
 - 아시아 국가들은 그들만의 개발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기술 및 지식공유를 통해 개도국 현지의 인력개발을 이루어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아시아국가들 간 남남협력의 경우, 무역·투자·기술 분야에 두루 집중하는 통합적 개발모델을 갖추고 있음.
- 무역, 투자, 기술에의 접근성을 평등하게 하려는 노력
- 생산과 소비에 있어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려는 노력
- 개발협력국 간 상호존중, 호혜적 평등, 윈-윈 전략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기초이념을 토대로 함.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패러다임도 "원조효과성"을 강조하기 보다 "개발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측면으로 변화

□ 인도의 국제개발협력

- 인도는 과거 네팔과 부탄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
- 어떤 나라도 계속 빈국으로 남아 원조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부유하여

원조를 제공하지 못함. 향후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제공받는 국가의 입장이 서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

- 인도는 차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개발협력 활동도 차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도는 ASEAN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협력이 증진, 주로 CLMV에 개발협력을 수행
 - 최근 ASEAN 국가들이 새로운 개발 파트너로 급부상하면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차이가 모호해짐.

□ 부산총회에서 제기된 이슈

-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DAC 공여국 및 신흥국 모두와 연관
-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통한 주인의식 강화에 대해, 수원국 연관 부처와 향후 논의가 필요
- 이 외 개도국 주도 능력개발 및 상호 책무성 강화 등 논의

□ 향후 논의과제

- DAC와 DCF 연계방안
-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에서 설정한 개발필러가 MDGs 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지 방안마련

④ Lessons and Experience from DAC Countries

- 진화하는 개발협력에 대한 DAC 공여국의 생각을 공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 Ian Shapiro (DFID, Head of Global and National Programmes) 주요 토의내용

- 긍정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신흥국이 부상, 글로벌 거버넌스에 변화를 가져옴.
- 향후 논의과제
 - 무역, 투자송금 등 다양한 국제 자원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원조는 그 적절성을 어떻게 유지해야할 것인가

- 부산에서 합의된 내용을 post-MDG 개발환경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Joanne Sharpe (AusAID Communication Manager) 주요 토의내용

- AusAID는 취약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
- 부산선언 결과문 이행과 함께 파리선언 이행 원칙을 재구성할 필요
- 호주는 동티모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 사전연구를 수행
- 부산총회가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포용, 성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

□ Bernd Dünzlaff (주인도 독일 대사관, Head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주요 토의내용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독일의 입장
 - 독일이 추구하는 목표가 지속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임.
 - 원조효과성 논의는 끝난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이 개발효과성 논의를 야기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 등 새로운 협력주체의 기여도를 증진해야 할 것임.
 - 파리선언 미완과제를 위한 이행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개발 파트너를 포용하고 업무분담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 개발협력 개선을 위한 노력
 -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최대 3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수행하도록 제한
 - 개발협력 기관으로 GIZ을 운영, 삼각협력을 더 많이 추진하도록 노력
 - 인도는 G20 국가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역할확대를 위해 노력
 - 독일은 인도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등 많은 연계를 맺으려고 노력

□ Elizabeth Warfield (USAID, Deputy Mission Director) 주요 토의내용

- USAID는 인도에서 빈곤층을 위한 개발을 가속화하기위해 노력

○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 혁신은 기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전달에서도 중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개발 패러다임에 영향을 주며, 빈곤층의 생활 개선에도 기여
-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연계할 것을 강조
- USAID는 최근 과학, 분석, 모니터링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수행하는 중
- 미국은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맹국이 되었음.

[회의사진]

